Issue Paper

2010. 8.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목차

요약

Ⅰ.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

Ⅱ. 중산층 확대의 긍정적 효과

Ⅲ.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결과

Ⅳ. 정책 쟁점과 방향

참고문헌

작성 : 김용기 연구전문위원(3780-8275)
ykim@seri.org
강성원, 이동원 수석연구원
박준, 문외솔 수석연구원
최홍 선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 Executive Summary 》

중산층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기반이라는 일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왜 그러한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인식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산층의 규모와 소득 비중의 확대가 지닌 정치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산층은 민주적 시민의식 배양과 이익집단의 발호 억제 등을 통해 정치안정과 부정부패 감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중산층 비중 확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품질을 개선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6년간 한국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4.9%p 감소해 2009년 현재 전체 가구 중 55.5%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도 지난 6년간 5.9%p 하락하였다. 중위소득의 증가율은 지난 6년간 3.2% 상승하여 평균소득 증가율의 7.4%에 못 미쳤다. 중산층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산층 내부에서도 핵심 중산층(중위소득 75~125%)가구의 비중과 소득점유율이 집중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여타 중산층(중위소득 50~75%, 125~150%)의 비중이 지난 6년간 각각 1.1%p와 0.4%p 하락한 반면, 핵심중산층의 비중은 3.4%p 하락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2007~2009년 사이 중위소득이 2.1% 감소하고 중산층 비중과 소득 비중이 감소한 점도 확인하였다.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해 중산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하위계층에 비해 가구주의 학력이 높은 반면 연령은 낮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근로소득이 계층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중산층이 육성되기는 어렵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25.6%에 달한다. 때문에 기존의 성장친화적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목적의식적 중산층 육성정책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은 학력 차별에 기초한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정부의 이전소득 크기를 늘리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 양육비 지원, 출산수당 등 가족수당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중산층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중산층의 처분가능소득 중 과도한 주거 및 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한다.

《 요 약 》

Ⅰ.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

1. 중산층에 대한 관심과 중산층의 역할

□ 최근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

-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 비중과 소득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음
  · 통계청은 2009년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가구 중위소득의 50~150% 기준) 비중이 66.7%로 2003년(70.1%)에 비해 3.4% 하락한 것으로 집계

- 정부와 여야 정당은 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육성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중산층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기반

- 중산층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
  · 경제사학자 Landes는 “이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중산층을 가진 사회”라며 “과거 영국 중산층의 존재가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지적

- 중산층은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갈등비용을 해소함으로써 성장에 기여
  · 중산층 컨센서스에 관한 연구는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확대가 재분배 정책의 도입, 정치적 불안정, 인적자본에 대한 과소투자를 통해 결국 저성장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

※중산층 컨센서스(Middle Class Consensus) :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높거나 해당 사회의 인종분포가 동질적인 정도

- 성장과 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층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 중산층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

-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산층 규모와 소득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위기 이후 재정적 제약요인과 함께 저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중산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산층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볼 때 의도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
  · 미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근로자 중위소득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수렴해야 한다고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중산층 태스크포스를 운영

2. 본 연구의 특징과 주요 성과

□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발표와 달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가구 가중치를 고려함으로써 실제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 중산층 비중에 관한 결과 또한 상이

- 가령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한국 중산층의 규모는 전체 가구 중 66.7%이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한국 중산층의 비중은 2009년 현재 55.5%에 불과

-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 가구(전체 5분위 중 2, 3, 4분위의 합)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참고: 통계청 발표 54.4%보다 6.3%p 낮음)

□ 정부의 소득이전에 따른 중산층 확대에 대해 국제비교

- 요소소득과 처분가능소득(요소소득 + 이전소득) 기준의 중산층 비중을 측정하여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정부의 소득 이전 역할이 중산층 비중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

※요소소득: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 지대, 이자 등의 소득

- 한국의 경우 국제비교를 위해 요소소득 기준 중산층(75~125%) 비중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 간의 차이가 6.9%p인 반면, 북유럽 4개국은 평균 27.6%p
  - 중산층 비중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소득이전 역할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낮은 수치라는 의미

□ 한국의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

- 근로소득의 비중이 한국의 소득계층(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대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높고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것이 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

- 그간 한국의 논문들은 중산층의 비중 증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분석은 미흡

- 본 연구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규제품질, 교육 수준의 관계, 1인당 GDP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분석
  - 또 중산층의 비중과 정치 안정 및 투명성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힘

Ⅱ. 중산층 확대의 긍정적 효과

1. 정치사회적 효과

□ 중산층은 민주적 시민의식을 배양

- '적당한 만큼의 소유(moderate possession of property)'는 자기절제, 책임감 등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한 경제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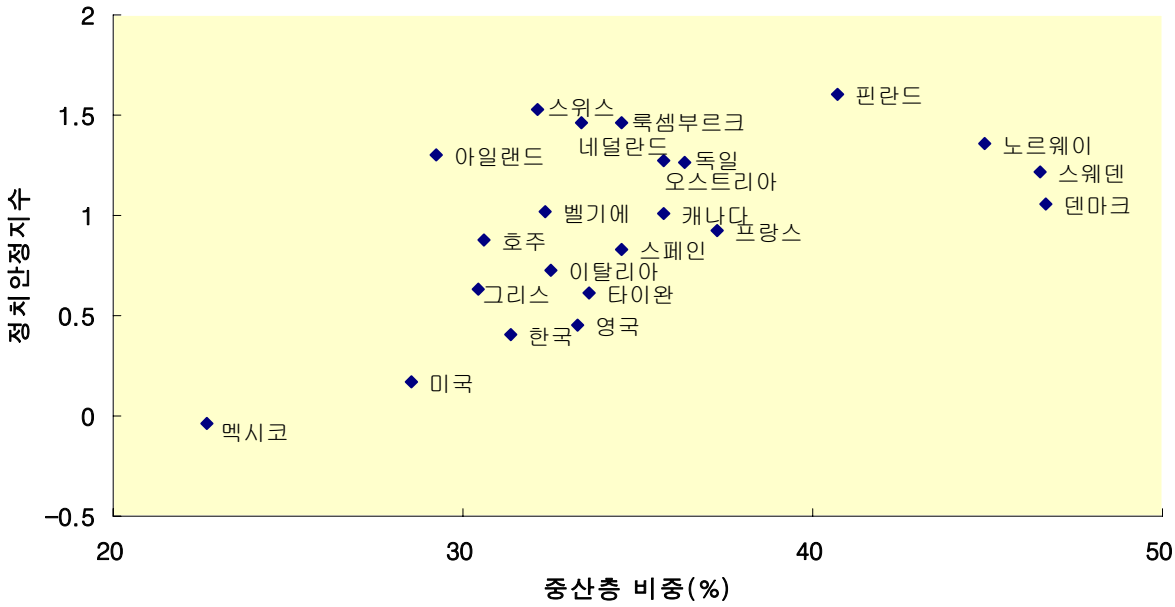
- 현대 사회에서 부유층은 무절제한 소비와 방종에, 빈곤층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워 무책임한 행동에 빠질 수 있는 반면, 중산층은 절제 있는 소비와 합리적 생활양식으로 건전한 민주사회 형성에 기여한다는 분석

□ 중산층은 정치안정에 기여

- 중산층의 확대는 계층구조를 다원화함으로써 부유층과 빈곤층 두 계급만 존재하는 경우보다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

- 중산층의 확대는 선거 경쟁을 통해 좌·우파 정당의 중도화를 유도하고 중도정당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
  · 22개국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비중과 정치안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상관계수 = 0.56)

중산층과 정치안정



주: 1) x축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중위가구소득 75~125% 기준)의 비중(%), y축은 정치안정지수
2) 네덜란드는 1999년 기준;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2000년 기준; 스위스는 2002년 기준; 호주는 2003년 기준;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는 2004년 기준; 스웨덴은 2005년 기준; 한국은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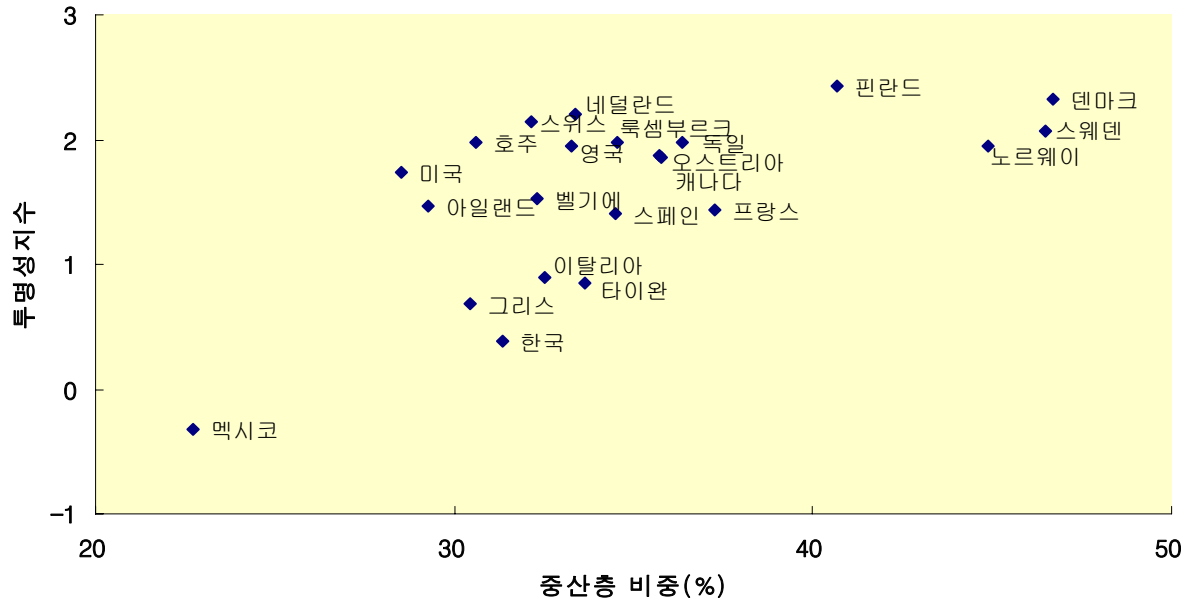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 중산층은 이익집단의 발호를 억제

- 중산층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이면서도 예산제약을 체감하는 수준의 소득을 얻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를 옹호
  - 중산층 중심의 사회에서는 정치엘리트와 특수이익집단 간의 유착관계가 억제

- 정량적 분석 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부정부패가 감소
  -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비중과 투명성 지수 사이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상관계수 = 0.62)

중산층과 투명성



주: 1) x축은 처분가능소득기준 중산층(중위가구소득의 75~125% 기준)의 비중(%), y축은 투명성 지수

2) 네덜란드는 1999년 기준;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2000년 기준; 스위스는 2002년 기준; 호주는 2003년 기준;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는 2004년 기준; 스웨덴은 2005년 기준; 한국은 2006년 기준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 경제적 효과

□ 중산층의 규모와 비중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 중산층 연구는 중산층의 규모와 경제력이 클수록 중요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라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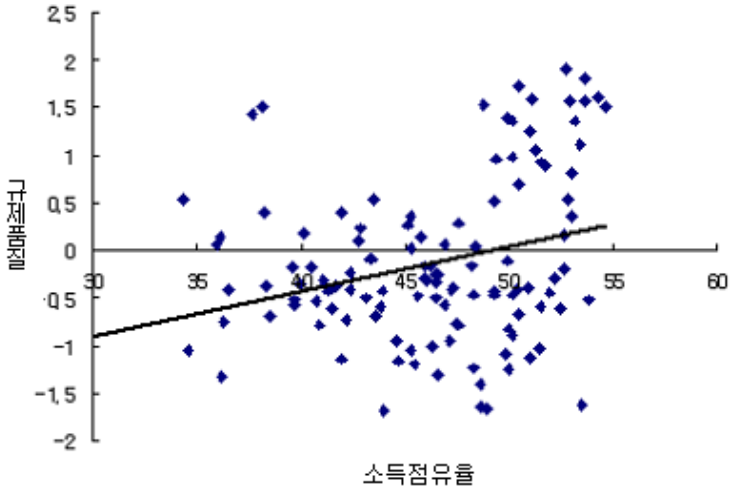
- 중산층이 두텁고 경제력이 큰 사회일수록 소득불균형도 낮은 편
  • 중산층의 소득 비중과 지니계수 간 상관계수는 0.96

□ 중산층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

- 중산층 컨센서스 이론은 중산층 비중 확대가 사회통합의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

- 사회통합은 경제위기나 기회 시에 서로 협력하는 수준을 나타내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책품질을 개선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규제품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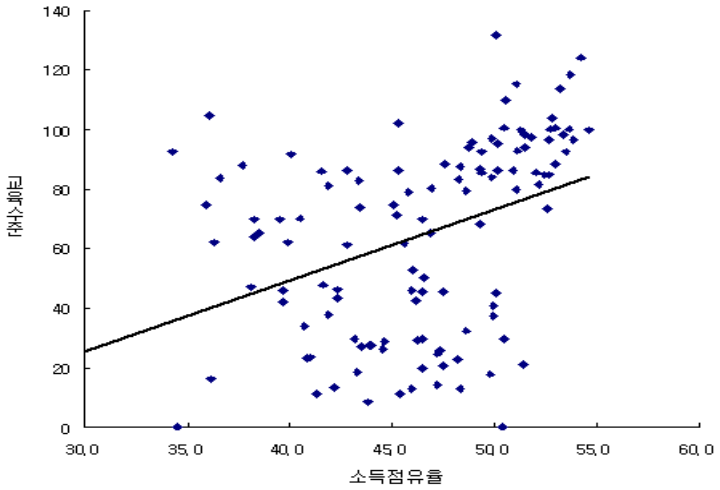


주: 1) 119개 국가
2) 규제품질은 민간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안정된 정책과 규제를 도안, 실행하는 정부의 능력
3)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29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 통합된 사회는 부의 재분배 방식이 교육이나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에 기여하는 것을 가능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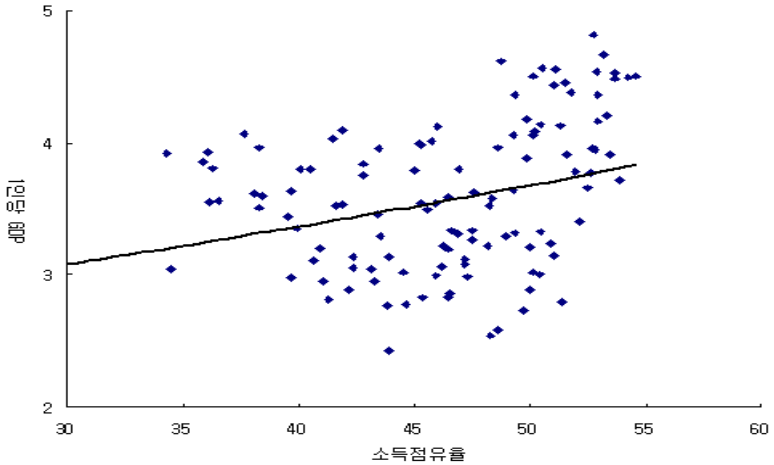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교육 수준



주: 1) 교육은 해당연령 중고등학교 취학 비중
2)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39
자료: World Bank, WDI.

- 중산층의 비중이 커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높은 편
  - Easterly (2001)는 부존자원(resource endowment)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1인당 GDP가 중산층 소득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 중산층 컨센서스에서 1인당 GDP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실증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로그 1인당 GDP



주: 1) 1인당 국민소득은 로그 값 평균
2)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33
자료: World Bank, WDI.

Ⅲ.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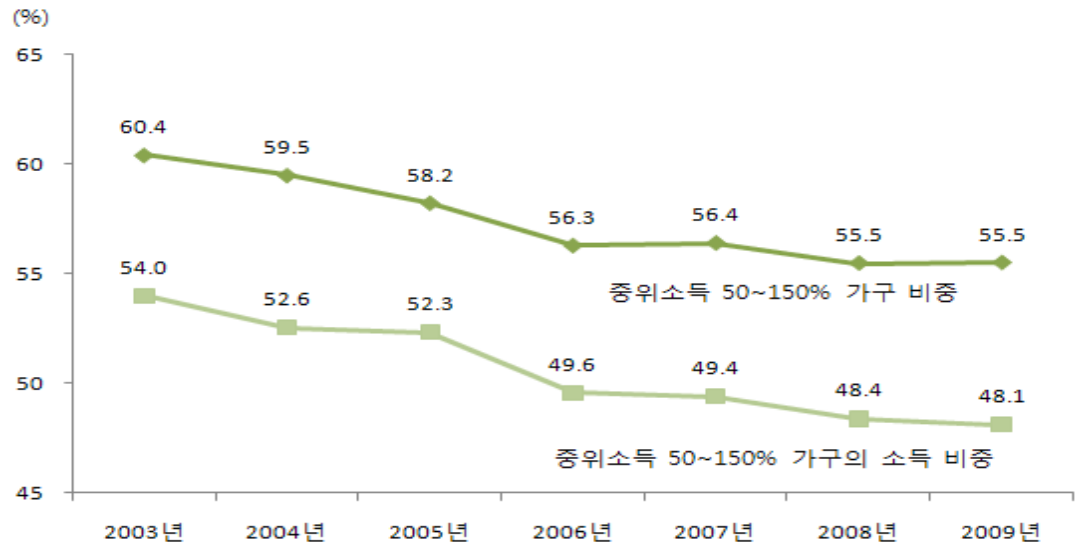
1. 한국 중산층의 변화 추세

□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는 지난 6년간 4.9%p 감소해 2009년 현재 전체 가구 중 55.5%

- 2003~2009년 비임금근로자가구(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2인 이상 기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산층 가구(중위가구소득의 50~150% 기준)의 비중은 60.4%에서 55.5%로 하락

-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의 소득 비중도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난 6년간 5.9%p 하락
  · 2003년 54.0% → 2009년 48.1%

전체 가구 중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가구와 소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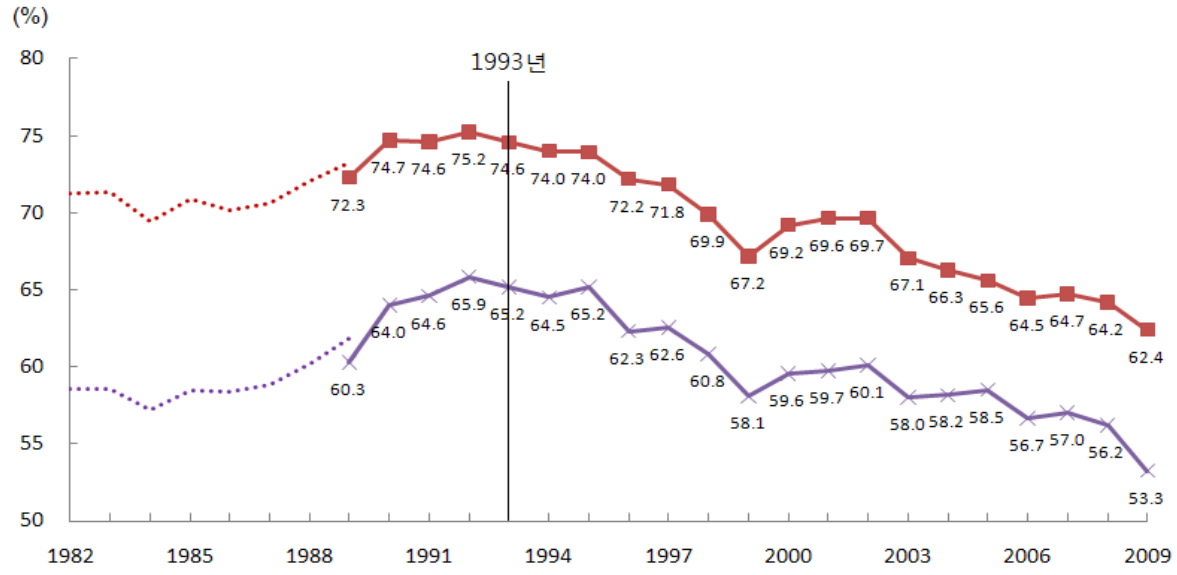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근로자 가구만 보면 중산층 비중은 1993년 이후 12.2%p 하락

-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근로자가구의 비중은 1993년 74.6%에서 2009년 현재 62.4%로 12.2%p 하락

- 이들 중산층 근로자가구의 소득 비중도 1993년 65.2%에서 2009년 현재 53.3%로 11.9%p 하락

근로자 가구 중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가구와 소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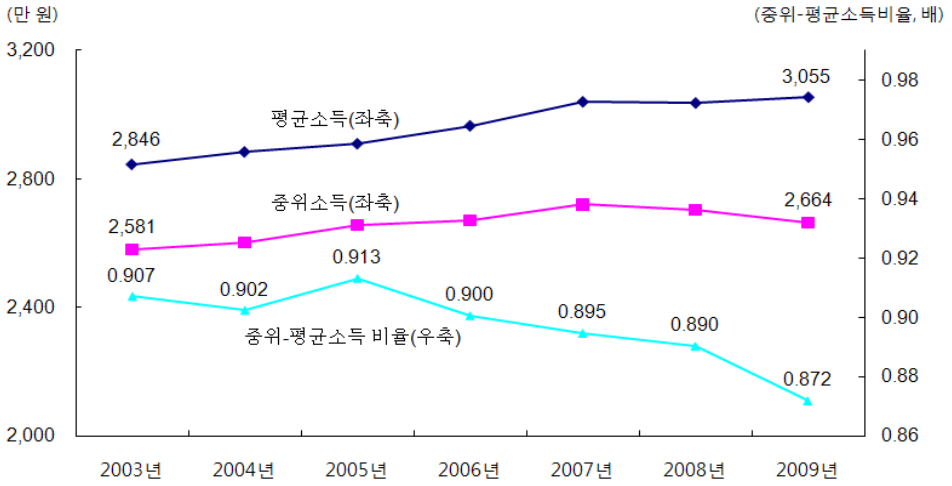


주: 1)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2) 1989년 이전 자료는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82~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음

- 2003~2009년 중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평균소득은 7.4% 상승하였으나 중위소득은 3.2% 상승에 그쳐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은 0.91에서 0.87로 3.9%p 하락
  - 중위소득 2003년 2,581만 원 → 2009년 2,664만 원
  - 평균소득 2003년 2,846만 원 → 2009년 3,055만 원

2003~2009년 평균-중위소득 비율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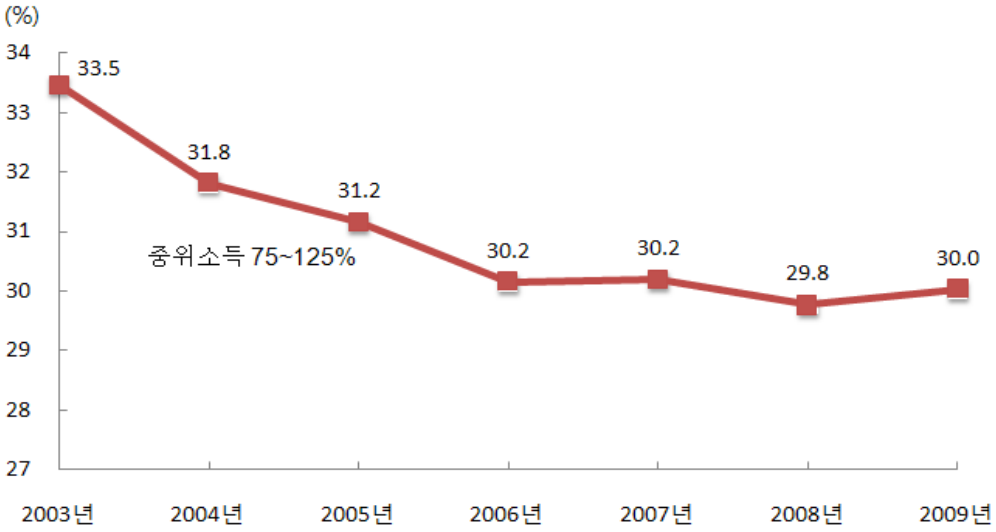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중산층 내부에서도 핵심 중산층의 비중과 소득이 집중적으로 하락

- 2003~2009년 기간 중 중위소득 50~75%와 125~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전체 가구의 비중은 각각 1.1%p와 0.4%p 하락한 반면, 중위소득의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3.4%p 하락

  · 75~125% 가구 비중은 2003년 33.5% → 2009년 30.0%

2003~2009년 중 중위소득 75~125% 가구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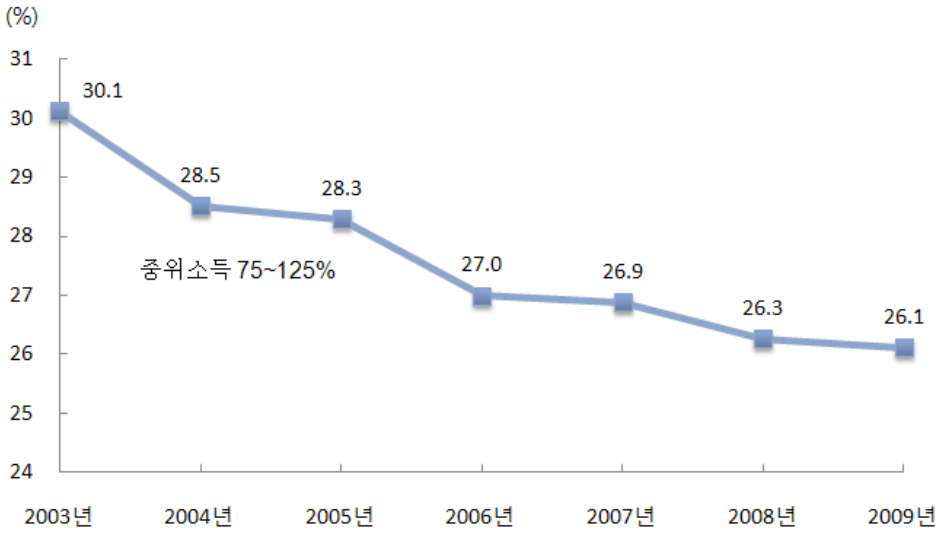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2003~2009년 기간 중 중위소득 50~75%와 125~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비임금 근로자가구 포함)의 소득 비중은 각각 0.9%p와 1.0%p 하락한 반면, 75~125%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은 4.0%p 하락
  · 75~125% 가구의 소득 비중은 2003년 30.1% → 2008년 26.1%

2003~2009년 기간 중 중위소득 75~125% 가구의 소득 비중 변화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7~2009년 사이 중위소득이 2.1% 감소하고 중산층 비중과 소득 비중도 소폭 감소

- 중위소득이 2.1% 감소한 반면 평균소득은 0.5% 상승하여 중위-평균소득 비율은 하락 → 중산층의 소득 비중이 더욱 작아졌다는 의미

- 중산층 가구 비율과 소득 비중도 모두 소폭 하락
  · 중산층 가구 비중은 0.9%p(중위소득 50~150% 기준) 감소하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은 1.3%p(중위소득 50~150%)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산층 가구의 변화

(단위: %, 만 원, 연평균)

연도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평균 소득 비율	중위소득 50~150% 가구 비중	중위소득 75~125% 가구 비중	중위소득 50~150% 소득 비중	중위소득 75~125% 소득 비중
2007년	2,720	3,041	0.895	56.41	30.20	49.40	26.88
2008년	2,704	3,037	0.890	55.49	29.76	48.40	26.26
2009년	2,664	3,055	0.872	55.52	30.03	48.12	26.1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7~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국제 비교

□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 한국은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의 75~125%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 크기가 OECD 21개국 중 16번째에 위치
  - 2006년 현재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가구소득(약 2,570만 원)의 75~125%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3%로 OECD 평균 34.7%를 하회

-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4개국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40.7~46.7% 수준으로 중산층이 가장 두터운 사회임을 입증

- 중산층을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할 경우에도 한국은 여전히 OECD 하위권에 위치
  - 2006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전체 가구의 58.9%로 OECD 21개국 중 17위
  -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멕시코(45.4%), 미국(55%), 아일랜드(56%), 벨기에(56.5%) 4개국에 불과

각국의 중산층 비중

(단위: %)

국가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75~125% 기준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50~150% 기준	해당연도
멕시코	22.7	45.4	2004
미국	28.5	55.0	2004
아일랜드	29.2	56.0	2000
그리스	30.4	59.6	2000
호주	30.6	61.3	2003
한국	31.3	58.9	2006
스위스	32.1	63.6	2002
벨기에	32.3	56.5	2000
이탈리아	32.5	60.9	2000
영국	33.3	62.1	2004
네덜란드	33.4	59.9	1999
스페인	34.5	61.2	2000
룩셈부르크	34.5	62.7	2004
캐나다	35.7	64.0	2004
오스트리아	35.8	64.9	2000
독일	36.3	66.4	2000
프랑스	37.3	67.7	2000
핀란드	40.7	71.2	2004
노르웨이	44.9	75.9	2004
스웨덴	46.5	76.9	2005
덴마크	46.7	77.5	2004
평균	34.7	63.2	

3. 한국 중산층의 특성

□ 중산층은 하위계층보다 근로소득이 크고 남성 장년 가구주가 많음

- 중산층은 여타 계층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금융·부동산 소득 및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음

소득계층별 소득 구성 비교 (2001~2007년 평균)

(단위: %)

구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 비중
50% 이하	47.9	2.1	4.0	4.5	40.7	0.9	21.1
50~150%	88.5	1.1	2.1	3.4	3.9	1.0	48.0
150% 이상	88.7	1.4	4.2	1.4	1.8	2.6	30.9
75% 이하	60.5	1.9	3.4	4.6	28.7	0.9	33.3
75~125%	89.8	1.1	2.2	3.3	2.8	0.9	26.2
125% 이상	89.9	1.2	3.6	1.5	1.8	2.0	40.5

주: 1) 각 소득 항목의 기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 총소득이 0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2) 민간 보험 수령액은 기타소득에 포함
3) 이전소득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모두 포함
4) 저소득층은 농업 종사자가 많은데, 이들은 도지료 수입이 있어서 부동산 소득 비중이 높음

- 중산층 가구는 하위계층에 비해서 가구주가 남성-대졸자-장년층인 가구가 많고, 상위계층에 비해서는 여성-고졸자 가구주가 많음

소득계층별 가구주 인적자본 비교 (2001~2007년 평균)

구분	여성 가구주 비중(%)	대졸 이상 가구주 비중(%)	평균연령 (세)	구분	여성 가구주 비중(%)	대졸 이상 가구주 비중(%)	평균연령 (세)
50% 이하	40.0	14.8	58.4	75% 이하	33.5	17.0	55.3
50~150%	13.1	28.9	47.2	75~125%	11.1	29.6	46.6
150% 이상	6.0	49.7	47.5	125%이상	6.8	45.3	47.0

주: 가구주가 있는 가구만 포괄

- 중산층과 여타계층 간 격차를 분석[1]한 결과 근로소득이 높으면 하위계층보다 중산층에, 중산층보다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
  - 근로소득이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하위계층보다는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24.4~41.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1) 중산층과 하위계층, 중산층과 상위계층 귀속 여부를 각각 이산종속변수 모형(Probit)으로 분석 (분석 내용은 부록을 참조)

・근로소득이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중산층보다는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28.6~4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 구성비 (2001~2007년 평균)

(단위: %)

구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중산층: 50~150%)						
중위-하위	100.9	0.8	1.4	2.8	-7.0	1.0
상위-중위	77.8	2.0	11.5	0.2	1.7	6.8
(중산층: 75~125%)						
중위-하위	101.2	0.8	1.6	2.5	-7.1	1.0
상위-중위	79.3	1.8	11.1	-0.1	1.8	6.2

주: 1) 100*(항목별 소득격차/총소득격차)

2) 중산층의 이전소득은 하위계층의 이전소득보다 작고 상위계층의 이전소득보다도 작은데, 이는 하위계층은 공공 이전소득이 크고 상위계층은 민간 이전소득이 크기 때문

4. 중산층 감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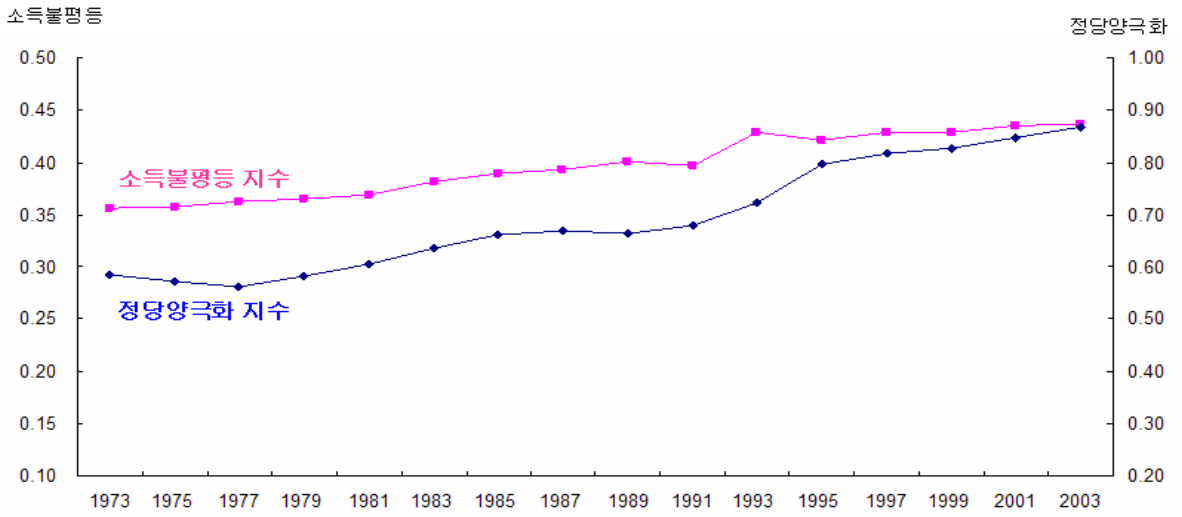
□ 중산층 비중의 감소는 사회갈등을 유발

- 중산층의 감소는 정치엘리트들의 이념적 양극화를 통해 정당 간 갈등을 심화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공화・민주 양당 내에 온건파 의원 수가 감소하고 양당 간 이념적 거리가 확대되었음

- 지니계수로 측정한 경제적 양극화 수준과 정당 간 정치적 양극화 지수 사이에는 0.96이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미국의 소득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주: 소득불평등 지수는 지니계수를 사용하고, 정치적 양극화 지수는 연방하원의 DW-NOMINATE Score를 사용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 McCarty, N., Poole, K., & Rosenthal, H. (2006). *Polarized America.* Cambridge: MIT Press.

□ 한국의 경우 舊중산층인 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상위계층과의 갈등이 심화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대표적 舊중산층인 자영업자 계층이 몰락하는 추세

- 지역상권에 진입하려는 대형유통자본과 토착 영세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
  - 舊도심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이 철거되면서 보상비 문제를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극한갈등을 표출

□ 한국의 중산층 비중이 감소한 데 따른 경제적 영향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 축소가 심화되기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조세, 교육 등 여러 정책에 있어 소득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커지는 양상이 두드러짐

- 결국 주요 정책을 실행, 수정 혹은 백지화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사회적 거래비용이 발생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들이 정치적 여건에 따라 자주 변경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 외고 폐지가 사교육 문제의 프락시(proxy) 전쟁으로 등장하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을 표출

Ⅳ. 정책 쟁점과 방향

1. 주요국의 중산층 대책

□ 美國: 고용 창출과 가계비용 절감을 통한 중산층 복원을 추진

□ 英國: 사회이동성 개선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주력

□ 日本: 취약계층 근로 지원과 대대적 경기부양책으로 중산층 복원 추진

2. 중산층 대책을 둘러싼 쟁점

(1) 노동시장 내 근로소득 관련

□ 근로소득은 중산층과 하위계층, 중산층과 상류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생산성과 관계없는 제도적인 근로소득 격차도 중요 요인

- 근로소득이 1 표준편차 (0.54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중산층에 속할 확률은 22.2%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 중 가장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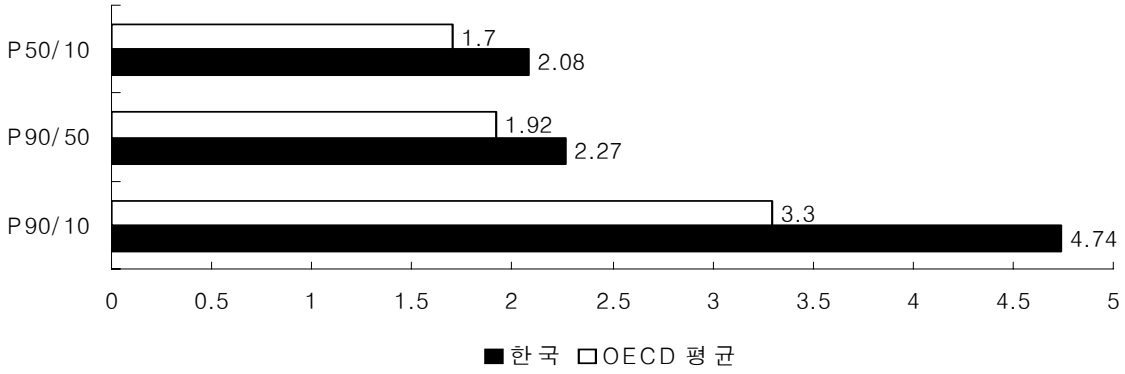
- 사업체 규모, 보이지 않는 차별 등 생산성 이외의 근로소득 격차를 반영하는 근로소득 추정치 잔차도 중요한 요인

□ 고용 여부보다는 근로소득의 크기가 상위계층 귀속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용의 질이 중산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

- 근로소득의 효과를 제외할 경우 고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가짐
  - 질이 높지 않은 고용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키지만 이전소득을 감소시켜 중산층에 귀속될 확률과 하위계층에 귀속될 확률 간에는 중립적인 영향
  - 상위계층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고용 여부보다는 질 높은 고용을 통한 높은 소득 수준이 중요

□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높아서 중산층을 육성하기 어려운 환경

근로소득 격차 비교 (2007년)



자료: 한국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09). "근로소득 불평등도의 국제비교". 『노동리뷰』, 57호, 69-71.

- 한국은 또한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25.6%로 고용의 질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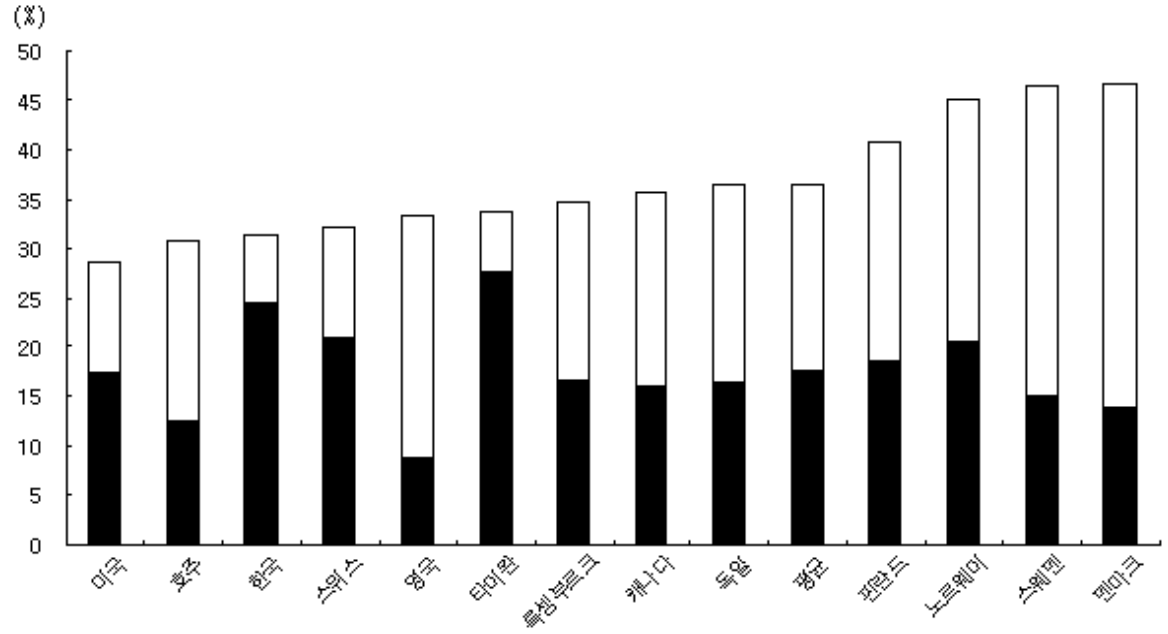
- 중산층의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근로소득이 단절될 경우 소득 유지가 어려운 상황

(2) 이전소득 관련

□ 소득세, 사회복지지출 등 정부의 재정 활동이 전반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을 증가시키며 북유럽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큼

- 처분가능소득 대신 노동소득, 자본소득 등 요소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산층 비중은 한국이 24.5%로 북유럽 4개국 평균인 17.1%를 상회
  - 요소소득 기준 시 북유럽 4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중산층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평균 27.6%p 감소한 반면 한국은 불과 6.9%p 감소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높은 소득세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음을 시사

요소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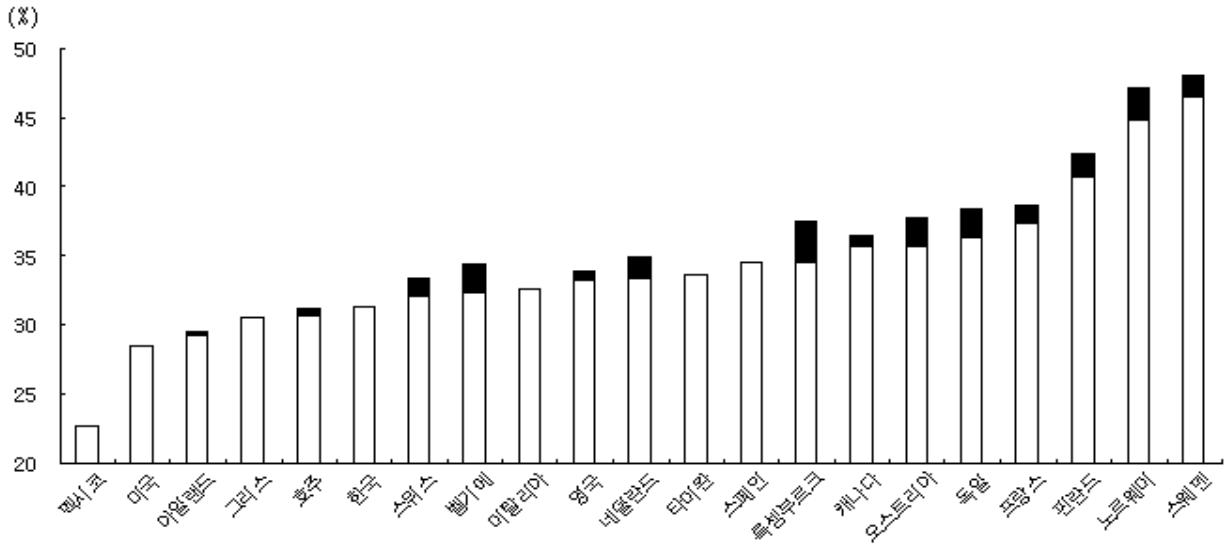


주: 1) 막대그래프 전체는 처분가능중위소득의 75~125% 기준 중산층 비중이고, 검은색 부분은 요소소득의 75~125% 기준 중산층 비중
2) 요소소득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를 토대로 재작성

- 처분가능소득에서 자녀양육비 지원, 출산급여 등 가족수당만 제외하더라도 북유럽 4개국의 중산층 비중은 평균 4.1%p 감소
  - 반면 한국, 대만,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가족수당이 미미하여 이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중산층의 비중은 불변

가족수당과 중산층 비중



주: 막대그래프 전체는 처분가능중위소득의 75~125% 기준 중산층 비중이고, 검은색 부분은 처분가능소득에서 가족수당항목 제외 시 감소하는 중산층의 비중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를 토대로 재작성

(3) 구조조정 관련

□ 한국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저부가가치화가 중산층 감소와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1997~2007년 사이 10~29인 중소기업의 월급여 총액은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86.2%에서 72.0%로 감소

- 국내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 총고용의 37.7%를 차지(OECD 29개국 중 3위)할 정도로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음
  - 서비스업은 평균 종사자 수가 4인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이며 생산성도 제조업 대비 40% 수준에 불과

□ 선별적 구조조정, 기술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

- 생산성이 낮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좀비 사업체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들은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보호

(4) 교육 관련

□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제도 교육이 사회적 성취와 계층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

- 중산층 대책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 하지만 교육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중산층 삶의 질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

- 중산층은 가계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계층으로 지나친 사교육 비중은 중산층의 지출여력을 축소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

3. 향후 정책방향

□ 기존의 성장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계도 존재

- 위기 시 혹은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실업의 당사자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친화적 정책은 중산층 형성의 필요조건

- 하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중산층 확충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
  · 한국은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높기 때문

□ 근로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생산성과 무관한 구조적 근로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

- 근로소득은 중산층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한국 노동시장에는 1류 대학 출신 여부 등 생산성과 무관한 구조적 근로소득의 격차가 존재

□ 중산층 비중 확대를 위해 이전소득의 크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

- 공적 소득이전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분야는 자녀 양육비 지원, 출산수당 등 가족수당 부문으로 사회적 합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사료
  ·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

□ 중산층의 처분가능소득 중 삶의 질과 무관한 주거 및 교육 비용의 과다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Ⅰ.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

1. 중산층에 대한 관심과 중산층의 역할

최근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

□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중과 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전체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2009년 한국 중산층 가구(가구 중위소득[2]의 50~150% 기준) 비중은 66.7%로 2008년(66.2%)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2003년(70.1%)에 비하면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4분기 중산층의 소득 비중(전체 5분위 가구소득의 총합계 중 2, 3, 4분위 합계의 비중)은 54.4%로 2009년 1/4분기 54.46%에 비해 소폭 하락

□ 정부와 여야 정당은 서민 생활의 안정과 중산층 육성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정부는 2009년 하반기부터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정책 표어로 제시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저리대출), 학자금 신용대출은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3]

- 여당 안상수 대표는 원내 대표 시절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한나라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新중산층 육성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힘[4]

2) 중위소득(median income)은 통계 대상 소득 중 가장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함.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합쳐 사람 수로 나눈 평균소득(mean income)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3) 정정길 당시 대통령 실장의 2009년 10월 8일 『2009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정치부장 세미나』(제주 서귀포 칼 호텔)에서의 발언. 윤진식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도 "서민의 내 집 마련. 자녀교육비, 금융이용 문제 등을 해결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것"이며 중산층이 두터운 것이 국내시장의 자생력과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 강조(2009년 10월 1일자 청와대 소식지).
4) 2009년 11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도 “서민 중산층을 위한 야당 정책연대를 만들자”며 중산층 육성정책의 중요성을 강조[5)]
  ·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간 중인 4월 25일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

중산층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기반

□ 사회가 중산층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들 중산층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

- 경제사학자 Landes는 “이상적(理想的)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는 중산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회”라며 “과거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중산층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6)]

- 중산층은 선진 서유럽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고, 현재 저소득 국가들의 핵심 과제는 강건한 중산층 육성

□ 중산층은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갈등비용을 해소함으로써 성장에 기여

- 중산층 컨센서스에 관한 연구 결과 계층 간 소득불균형의 확대가 저성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7)]
  · 소득불균형의 확대가 재분배 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 불안정을 확대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과소투자라는 경로를 통해 결국 저성장을 야기한다는 것

※중산층 컨센서스(Middle Class Consensus):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높거나 해당 사회의 인종분포가 동질적인 정도

5) 2009년 11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6) Landes, D. (1998).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7) Easterly William (2001).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6: 317-335.

- 중산층이 확대되면 계층 간 불균형이 축소됨으로써 저성장을 야기하는 각종 요인이 완화

□ 중산층은 성장과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계층으로서의 역할[8]을 담당

- 중산층은 인적자본 투자와 저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가 계층이 될 기반을 형성

- 중산층은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질 좋은 상품 생산을 위한 투자와 마케팅을 견인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

중산층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

□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중산층의 규모와 소득 비중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금융위기 직후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야 하고, 위기 이전에 비해 추세적 저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산층의 자연스러운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중산층 육성을 위한 목적의식적 정책이 없었더라도 성장에 따라 중산층이 형성되고 확대되었음

□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산층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볼 때 의식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

- 최근 사회갈등의 심화와 이에 따른 갈등비용의 증가는 중산층의 추세적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8) Banerjee, A. V. & Duflo, E. (2008). What is Middle Class about the Middle Classe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3-28.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근로자 중위소득 증가율이 생산성의 증가율에 수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처럼 한국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2. 본 연구의 특징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와 달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가구 가중치를 고려함으로써 실제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9)]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규모는 전체 가구 중 66.7%로 되어 있지만, 본 연구 결과 한국의 중산층 규모는 2009년 현재 55.5%로 추정

-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 가구(전체 5분위 중 2, 3, 4분위의 합)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통계청 조사 54.4%보다 6.3%p 낮은 48.1%

□ 소득 이전으로 중산층을 확대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국제비교

- 요소소득과 처분가능소득(요소소득 + 이전소득) 기준의 중산층 비중을 측정하여 국제비교를 함으로써 중산층 육성에 관한 정부의 소득 이전 역할을 측정

※요소소득: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 지대, 이자 등의 소득

9)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는 가구원의 수가 서로 다른 가구들 사이의 후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소득을 균등화했는데, 균등화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정. 균등화한 소득을 가구원 각각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단위의 분배지표를 작성. 따라서 통계청의 중위소득은 개인소득으로 변환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중위소득을 산정했다고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을 산정했는데, 이 때 통계청 원시자료에서 제공하는 가구 가중치만을 고려하여 자료 가공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제 자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의 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중위소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원시자료에서 제공하는 가중치가 개별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의 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특히 통계청 방식을 따를 경우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가가구를 포함하였음.

- 소득 이전을 통한 중산층 비중 확대의 정부 역할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
  - 한국의 경우 요소소득 기준 중산층(국제비교에 통용되는 중위소득 75~125% 기준, 2006년) 비중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의 차이가 6.9%p에 불과
  - 북유럽 4개국은 정부의 소득 이전 역할을 통해 중산층의 비중이 평균 27.6%p 증가

□ 한국의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

- 중산층의 소득구성과 인적자본의 특성을 포함해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인적자본을 비교

- 한국의 소득계층을 구분할 때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가장 크며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대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높고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것이 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지 국제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

- 그간 연구들은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전제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

- 본 연구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규제품질, 교육 수준, 1인당 GDP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
  - 또 중산층의 비중과 정치 안정 및 투명성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

Ⅱ. 중산층 확대의 긍정적 효과

1. 정치사회적 효과

중산층은 민주적 시민의식을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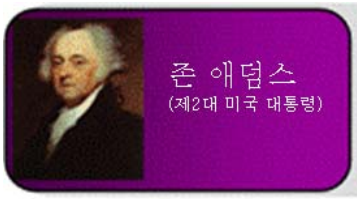
□ '적당한 만큼의 소유(moderate possession of property)'는 자기 절제, 책임감 등 시민의식을 갖추기 위한 경제적 조건

- 시민의식을 갖춘 개인은 성숙한 민주사회의 근간
  ·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줄 때 안정적으로 정착

고대 그리스의 중산층과 시민의식

- 고대 그리스에서 중산층은 귀족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지만 노예와 달리 신분적으로 자유로워 정치참여가 가능했던 '시민(Citizen)'을 지칭
· 시민은 자유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뿐 아니라 직접민주정치였던 폴리스(Polis)의 國政에 참여하는 데 따른 책임을 이행
-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정치학(Politics)』에서 "최선의 정치체제는 중산층이 정부를 맡고, 다른 두 계급을 數的으로 압도하는 체제"라고 설파

-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17~18세기 英美사회에서는 민주적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경제적 토대로서 자영농 중심의 사회구조를 강조
  · 자영농은 소작농에 비해 자립심과 책임의식이 강하고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주의의 버팀목으로 작용



존 애덤스
(제2대 미국 대통령)

"국민이 자유, 덕성,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들이 소규모의 토지를 고르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John Adams to James Sullivan, 1776)

- 현대 사회에서도 부유층은 무절제한 소비와 방종으로 인해, 빈곤층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워 무책임한 행동에 빠질 수 있는 반면, 중산층은 절제 있는 소비와 합리적 생활양식으로 건전한 민주사회 형성에 기여
  - 조셉 바이든 美 부통령 수석경제보좌관 제리드 번스타인은 중산층을 "생활비를 벌지만 아무 생각 없이 퇴근 후 피자 한 판, 영화 관람, 장거리전화 등에 소비할 수는 없는 봉급생활자들"이라고 정의[10]

중산층은 정치안정에 기여

□ 중산층의 확대는 계층구조를 다원화함으로써 부유층과 빈곤층 두 계급만 존재하는 경우보다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

- 중산층은 부유층과 빈곤층 중 한 계층이 집권해 다른 계층을 지배하고자 할 경우[11] 이를 억제하는 완충적 역할

- 서양 근대사를 보더라도 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려면 귀족과 농민·임금노동자 사이에 위치한 신흥 자본가, 즉 부르주아(Bourgeois)가 필요[12]

□ 중산층의 확대는 선거를 통해 좌·우파 정당의 중도화를 유도하고 중도정당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

- 중산층은 분배문제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중간 입장을 견지
  - 한 나라의 정당체제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반영하여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등 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형성
  - 빈곤층지지 정당은 공적 소득이전을 주장하는 좌파정당이 되는 반면, 부유층지지 정당은 공적 소득이전에 반대하는 우파정당으로 정립

10) "There are working families who can pay their bills, but they have to really think about such minimal expenditures as picking up a pizza after work, going to the movies, making a long-distance telephone call. They may have some investments, but they depend on each paycheck for their well-being." (What is Middle Class? (2003. 11. 29.). *Washington Times*.)

11)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부유층은 빈곤층을 멸시(despise)하고 빈곤층은 부유층을 시기(envy)하기에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적대적 관계" (Aristotle. *Poli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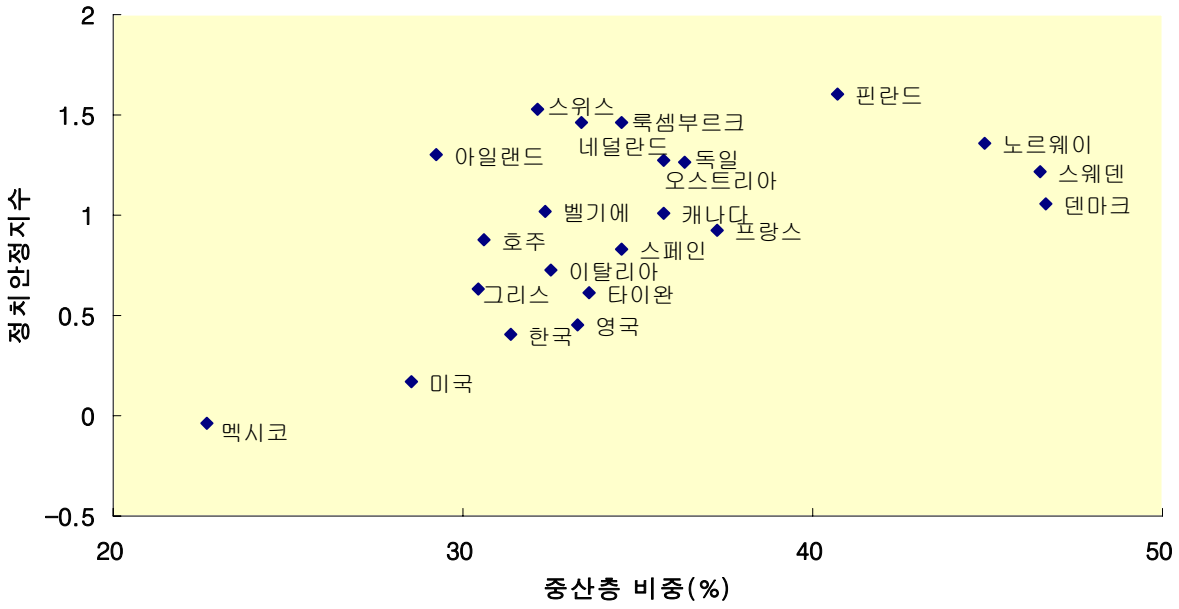
12) Moore, Jr., B.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MA: Beacon Press.

-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산층이 확대되면 이들이 지지하는 온건정당이 강화되고 중산층이 반대하는 극단정당은 약화[13]
  -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선거일수록 중도적인 무당파 유권자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므로 좌우정당의 중도화가 촉진

□ 정량적 분석 결과 중산층 비중이 높을수록 정치안정이 증대되는 것으로 판명

- 22개국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비중과 정치안정[14]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상관계수 = 0.56)

중산층과 정치안정



주: 1) 중산층 비중은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75~125% 기준
2) 네덜란드는 1999년 기준;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2000년 기준; 스위스는 2002년 기준; 호주는 2003년 기준;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는 2004년 기준; 스웨덴은 2005년 기준; 한국은 2006년 기준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13) Lipset, M. S.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69-105.

14) 정치안정은 정부가 정치폭력 또는 테러 등에 의해 위협받거나 전복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에서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변수를 사용

중산층은 이익집단의 발호를 억제

□ 중산층은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이면서도 예산의 제약을 체감하는 수준의 소득을 얻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를 옹호

- 중산층은 실질처분가능소득 제고를 위해 가격하락 효과가 있는 시장개방, 높지 않은 소득세율, 인플레이션 억제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지지

- 중산층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으로서 자유시장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15)]

□ 중산층 중심의 사회에서는 정치엘리트와 특수이익집단 간의 유착관계가 억제

-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 천연자원 등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독점적 이윤을 취하는 부유층 및 부유층으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요구하는 빈곤층과 달리 중산층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
  - 현대 사회의 중산층은 전문직 종사자, 지식근로자, 중소기업 경영자, 숙련기술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

- 중산층은 정치 엘리트가 정치적 지지를 받는 대가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관심
  - 정치 엘리트가 소수에게 주는 특혜는 다수 중산층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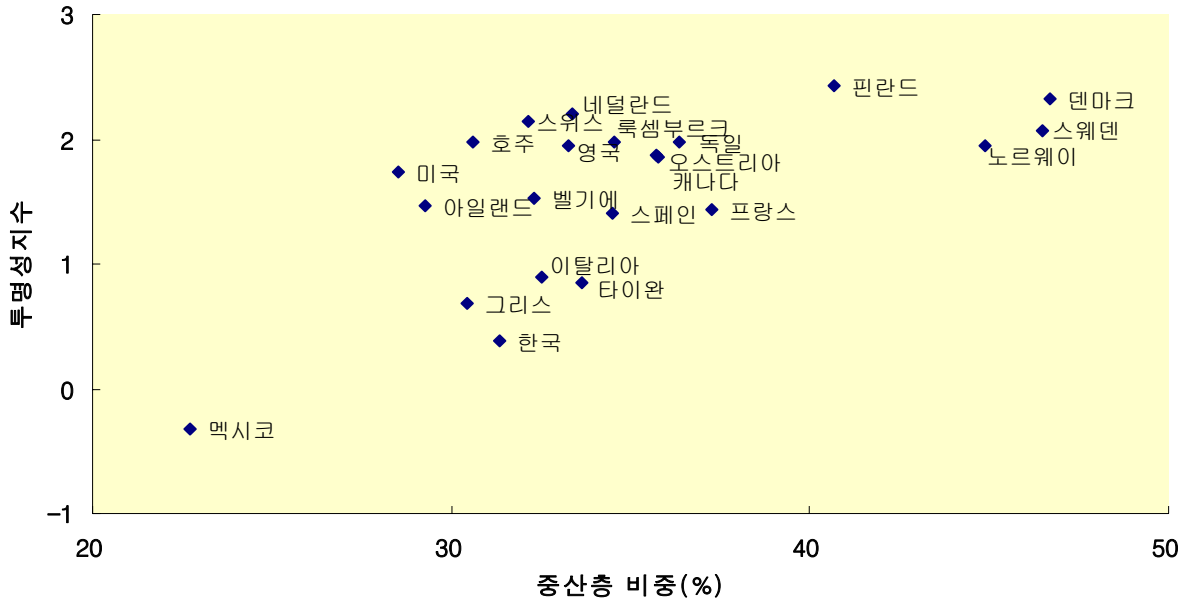
- 따라서 중산층 중심의 사회에서는 정치 엘리트를 감시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하고 특수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채택

□ 정량적 분석 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부정부패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명

15)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유권자 집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Rajan, R. & Zingales, L. (2003). *Saving Capitalism form the Capitalists*. New York: Crown Business.)

-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비중과 투명성 지수[16] 사이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상관계수 = 0.62)

중산층과 투명성



주: 1) 중산층의 비중은 처분가능기준 중위가구소득의 75~125% 기준
2) 네덜란드는 1999년 기준;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2000년 기준; 스위스는 2002년 기준; 호주는 2003년 기준;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는 2004년 기준; 스웨덴은 2005년 기준; 한국은 2006년 기준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인도 사회에서 중산층의 효과

▷ 인도 사회에서는 최근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교육 등 공공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
- 1950년에 개교한 명문 인도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은 2009년 현재 자체 보유한 15개 캠퍼스 중 10개가 인도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1994년 이후 설립
- 고등교육의 최대 수혜자인 인도의 중산층이 고등교육의 확대를 요구

자료: The Other Moore's Law. (2009. 2. 12.). *The Economist.*

16) 국가기관이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capture)되는 등 정부의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정도를 의미.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에서 'Control of Corruption' 변수를 사용

2. 경제적 효과

중산층의 규모와 비중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 중산층의 규모(size)나 경제력(economic power)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줌

- 중산층의 규모와 경제력이 클수록 중요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라고 평가
  - 중산층의 규모는 총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중위소득의 50~150%에 포함되는 가구의 비중
  - 중산층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소득점유율은 소득 5분위 중 2~4분위(중위 6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17]

- 중산층의 인구 비중이 커도 경제력이 약하면 고소득층, 혹은 소수 엘리트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 활동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음

□ 중산층이 두텁고 중산층의 경제력이 큰 사회일수록 소득불균형이 낮은 편

- 중산층의 소득 비중과 지니계수 간 상관계수는 0.96[18]

- 하지만 중산층의 규모나 경제력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님[19]

중산층 컨센서스는 사회통합의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 중산층 컨센서스 이론은 중산층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설명[20]

- 중산층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

17) 유경준, 최바울 (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1).
18) 119개 국가를 대상(2000~2008년 평균)
19) 미국은 중산층의 비중이나 경제력이 크나,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균형이 높은 편이며, 헝가리는 중산층의 비중이 낮지만 소득불균형도 낮은 편. (Easterly, W., Ritzen, J. & Woolcock, M. (2006).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Economics & Politics,* 18(2), 103-120.)
20) Easterly, W., Ritzen, J. & Woolcock, M. (2006).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Economics & Politics,* 18(2), 103-120.

- 사회통합은 경제위기나 기회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력하는 수준을 나타내며,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책품질과 관련
  - 중산층 규모가 감소하면 사회통합이 저하되고, 이는 곧 정책결정자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제도개혁을 어렵게 하는 사회에 내재된 무형의 제약조건으로 작용

중산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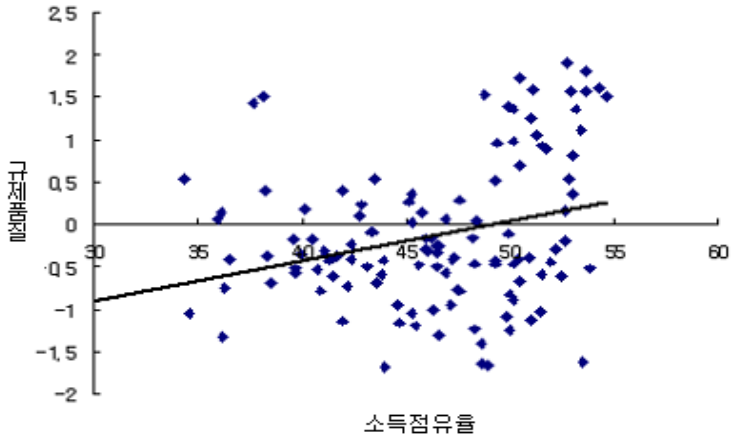
▷ 중산층 컨센서스는 중산층이 두텁고 경제력이 강한 사회를 나타냄
-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높거나 해당 사회의 인종분포가 동질적인 정도를 나타냄
- 중산층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회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적은 사회를 의미

▷ 중산층의 소득 비중이 높은 사회일수록 경제 수준이 높고, 교육, 건강, 인프라, 경제정책의 질, 정치적 안정 등의 결과가 좋음

자료: Easterly, W. (2001).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6(4), 317-335.

- 소득이나 인종적으로 분열된 사회는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정책결정이 어려움
  - 예를 들면,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이후 저조한 성장률을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 분열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21]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규제품질



주: 1) 119개 국가
2) 규제품질은 민간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안정된 정책과 규제를 도안, 실행하는 정부의 능력
3)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29[22]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1) Rodrik, D. (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4), 385-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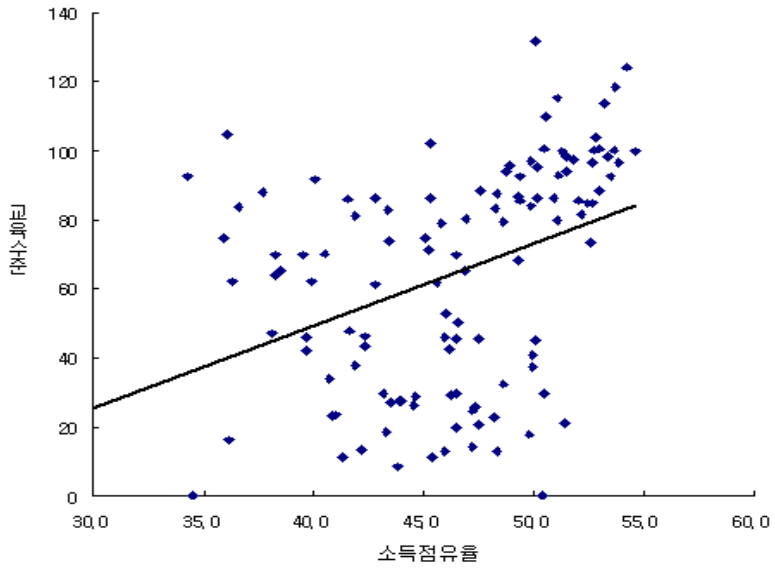
22) 상관계수 유의성(Significance of the Coefficent Correlation) 테스트에서 상관계수가 0이라는 가설을 기각

□ 통합된 사회는 부의 재분배 방식이 교육이나 인프라 등 미래 성장동력에 기여하는 것을 가능케 함

- 중산층이 튼튼하여 통합된 사회에서는 공공재나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쉬워 親성장 정책을 도입하기에 수월

- 두터운 중산층은 소수 엘리트 계층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중하위계층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견제[23)]
  - 소득양극화가 심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캘리포니아 州)의 고소득층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므로 공교육 지출을 지지하지 않으나, 중산층이 많은 인근 오렌지 카운티는 학교 증설에 필요한 채권 발행을 쉽게 통과시킴[24)]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교육 수준



주: 1) 교육은 해당연령 중고등학교 취학 비중
2)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39

자료: World Bank, WDI.

23) Bourguignon, F. & Verdier, T. (2000). Oligarchy, Democracy, Inequalit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2(2), 285-313.

24) Lee, D. & Borcherding, T. (2006). Public Choice of Tax and Regulatory Instruments-The Role of Heterogeneity. *Public Finance Review,* 34(6), 607-636.(이동원 외 (2009).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에서 재인용)

중산층이 취약한 사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성장을 억제

▷ 중산층이 취약한, 즉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소득재분배와 인적자본 축적 문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정치제도를 불안하게 함
- 분배갈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다수의 저소득층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투자 등)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재분배정책을 지지
-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부의 불평등은 다수의 저소득층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방해하며, 같은 계층 간 혼인이 이 같은 불평등을 심화
  · 담보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부유층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
- 정부가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분배정책과 엘리트를 위한 과두제(Oligarchy) 보호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치 불안이 조성

자료: Persson, T. & Tabellini, G. (1994). Is Inequality Harmful for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4(3), 600-621.; Alesina, A. & Rodrik, D. (1994).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109(2), 465-490.; Galor, O. & Zeira, J. (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1), 35-52.; Fernandez, R., Guner, N. & Knowles, J. (2005). Love and Mone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Household Sorting and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 273-344.; Perotti, R. (1996).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cy: What the Data Say.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149-188.

□ 최근 연구에서는 중산층이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주장도 존재[25]

- 미래지향적이며 투자를 위해 현재 소비를 기꺼이 포기하는 기업가들이 중산층에서 다수 배출되고, 이들이 고용과 생산성 증가에 기여[26]
  · 산업혁명 이후인 19~20세기 초반 교육과 저축을 중요시하는 인내심 많은 중산층이 귀족계층을 제치고 새로운 경제 엘리트로 부상[27]

- 양질의 제품에 대한 중산층의 소비수요가 생산과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을 높임[28]
  · 중산층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통한 내수시장의 확대가 산업발전에 기여[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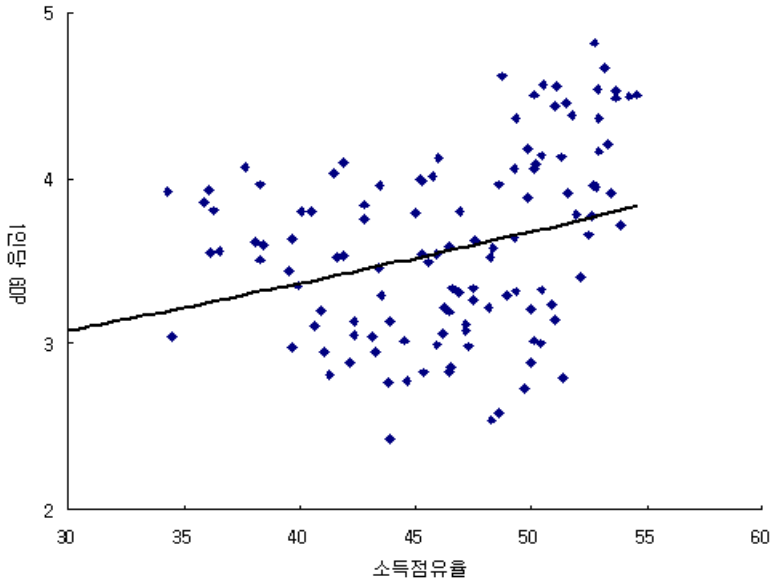
25) Banerjee, A. & Duflo, E. (2008). What Is Middle Class about the Middle Classe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3-28.
26) Acemoglu, D. & Zilibotti, F. (1997). Was Prometheus Unbound by Chance? Risk, Diversification, and Growth.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4), 709-751.
27) Doepke, M. & Zilibotti, F. (2005). Social Clas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2-3), 516-524.
28) Banerjee, A. & Duflo, E. (2008). What Is Middle Class about the Middle Classe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3), 3-28.
29) Murphy, K. M., Schleifer, A. & Vishny, R. W. (1989). Industrialization and the Big Pu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5), 1003-1026.

□ 데이터로 볼 때도 중산층의 비중이 커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높은 편

-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45% 이상인 국가군에서 중산층이 1인당 GDP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짐
  -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50% 이상인 국가를 부국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여러 편차가 존재[30]

-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커져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逆인과관계의 가능성도 존재하나 기존 연구는 그 가능성을 배제
  - Easterly (2001)는 부존자원(resource endowment)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1인당 GDP가 중산층 소득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후 중산층 컨센서스에서 1인당 GDP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실증[31]

중산층의 소득점유율과 로그 1인당 GDP



주: 1) 1인당 국민소득은 로그 값 평균
2)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33

자료: World Bank, WDI.

30) 기존 연구는 80여 개국의 샘플과 1960~1996년 평균을 기준으로 중산층 컨센서스의 효과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119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업데이트된 자료(2000~2008년)로 분석하였음.

31) 적도에 가까운 국가들은 수출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이 자원은 특정 엘리트 계층이 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감소하게 된다.

Ⅲ.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결과

1. 한국 중산층의 변화 추세[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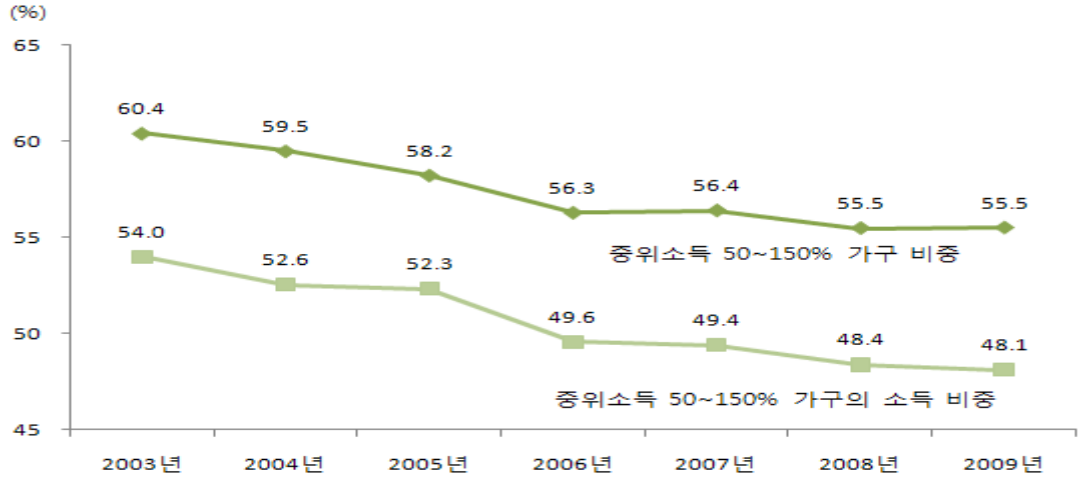
한국 중산층 가구는 지난 6년간 4.9%p 감소해 전체 가구 중 55.5%

□ 2003~2009년 비임금근로자가구(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2인 이상 기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간소득이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 비중과 소득 비중은 모두 하락[33)]

- 중산층의 가구 비중은 지난 6년간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4.9%p 하락
  · 2003년 60.4% → 2009년 55.5%

-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의 소득 비중도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난 6년간 5.9%p 하락
  · 2003년 54.0% → 2009년 48.1%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가구 및 소득 비중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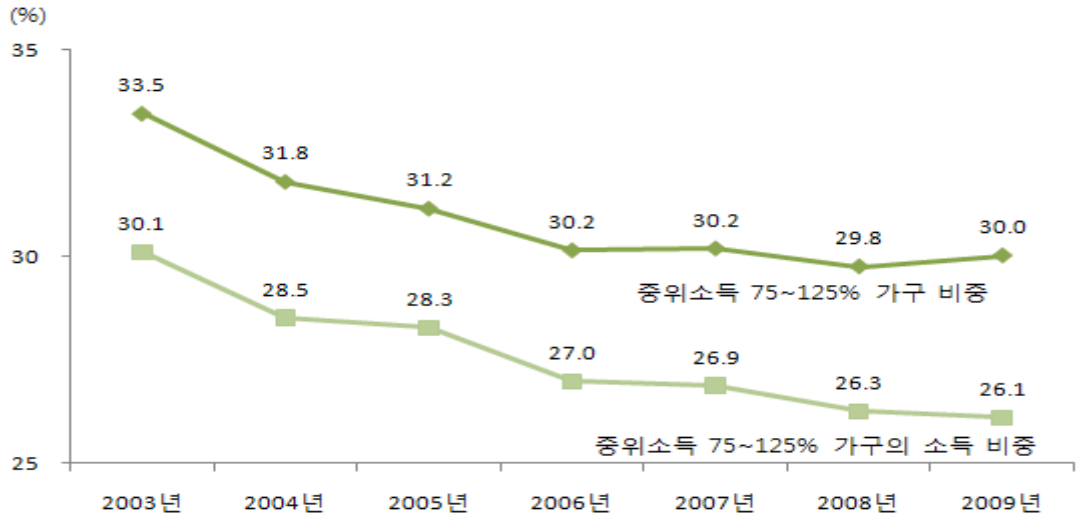
32) 본 절에서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득 자료는 소비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05년)를 사용하여 실질화하였고,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필요한 통계량을 계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에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소득을 차감하여 계산
33) 2003년부터 비임금근로자들의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상세 소득 자료가 제공

□ 연간소득이 중위소득의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 또한 지난 6년간 가구 비중과 소득 비중이 모두 하락[34)]

- 중산층의 가구 비중은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3.4%p 하락
  · 2003년 33.5% → 2009년 30.0%

- 중산층의 소득 비중은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4.0%p 하락
  · 2003년 30.1% → 2009년 26.1%

중산층(중위소득 75~125%)의 가구 비중과 소득 비중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2003~2009년 전체 가구를 소득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산층에 해당하는 2~4분위 가구의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득 비중은 하락

-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2~4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6.6% 증가했으나 이 가구들의 소득 비중은 0.4%p 감소
  · 2~4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2003년 2,658만 원 → 2009년 2,833만 원
  · 2~4분위 가구의 소득 비중은 2003년 56.1% → 2009년 55.6%

34)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125%에 해당하는 가구로 좁혀 분석하는 이유는 중산층 관련 국제 연구들과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

2003~2009년 2~4분위의 평균소득과 소득 비중

연도	평균소득	소득 비중
2003년	2,658만 원	56.1%
2009년	2,833만 원	55.6%
2003~2009년 변화[1)]	6.58%	-0.42%p

주: 평균 소득은 2003~2009년 증가율이고 소득 비중은 2009년 소득 비중과 2003년 소득 비중의 차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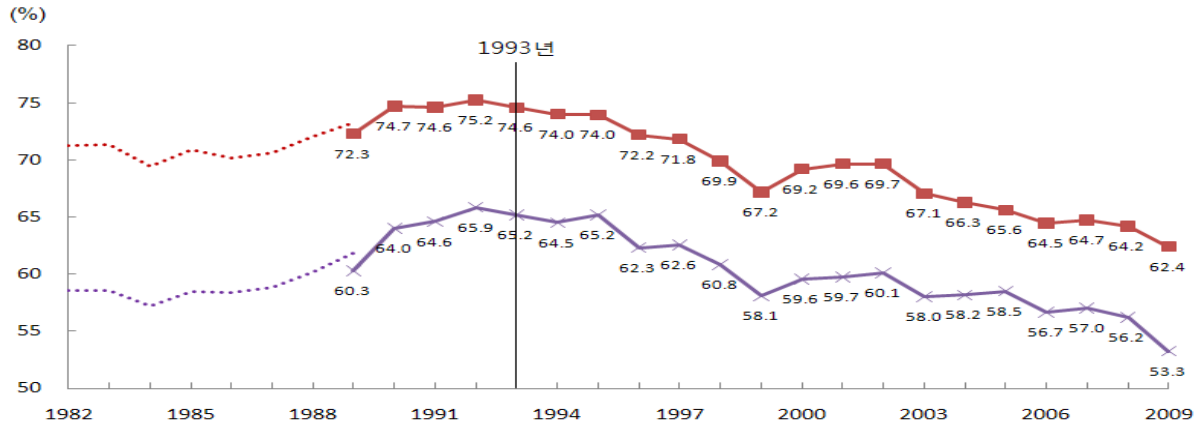
근로자 가구만 보면 중산층의 비중은 1993년 이후 12.2%p 하락[35)]

□ 연간소득이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구의 규모와 이들의 소득 비중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36)]

-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1993년 74.6%에서 2009년 현재 62.4%로 12.2%p 하락

- 이들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소득 비중도 1993년 65.2%에서 2009년 현재 53.3%로 11.9%p 하락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가구 비중과 소득 비중



주: 1)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2) 1989년 이전 자료는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82~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35) 통계청은 1982년 이후 가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실시된 가계조사는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 한정되었음. 2003년 이후에는 농가 가구 및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한 가계조사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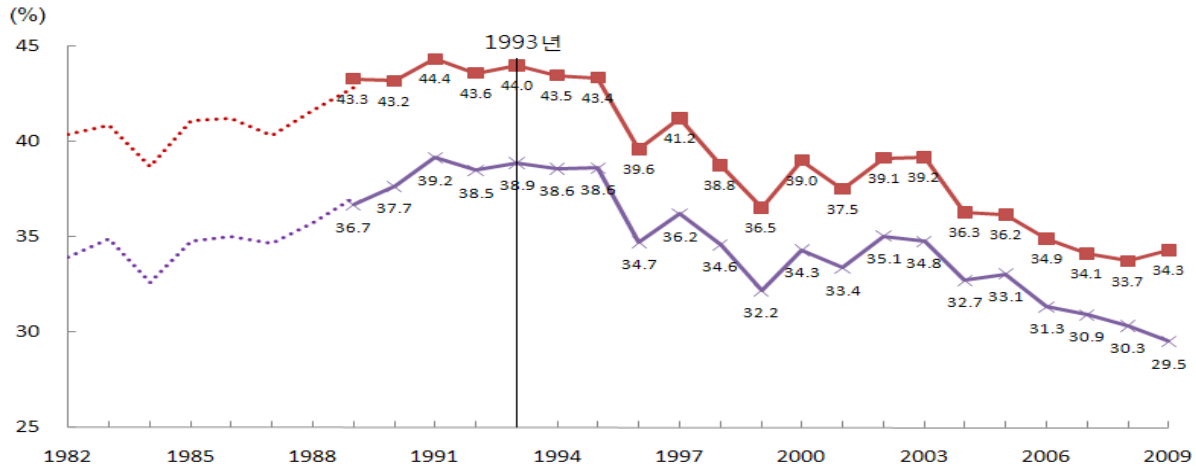
36) 소득분배가 1990년대 초반까지 개선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이철희 (2006). "1996~2000년 가구소득불평등 확대요인 분해: 임금, 고용, 근로시간, 가구구조 변화의 효과." 신인석·한진희 (편),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분석과 정책방향』(pp.345-388). 서울: KDI.; 성명재 (2009). "소득분배 동향 고찰." 『재정포럼』, 160, 27-50.

□ 중위소득 75~125%를 기준으로 한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규모와 이들의 소득 비중 역시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1993년 44.0%에서 2009년 현재 34.3%로 9.7%p 하락

- 이들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소득 비중은 1993년 38.9%에서 2009년 현재 29.5%로 9.4%p 하락

중산층(중위소득 75~125%)의 가구 비중과 소득 비중



주: 1)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2) 1989년 이전 자료는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82~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악화[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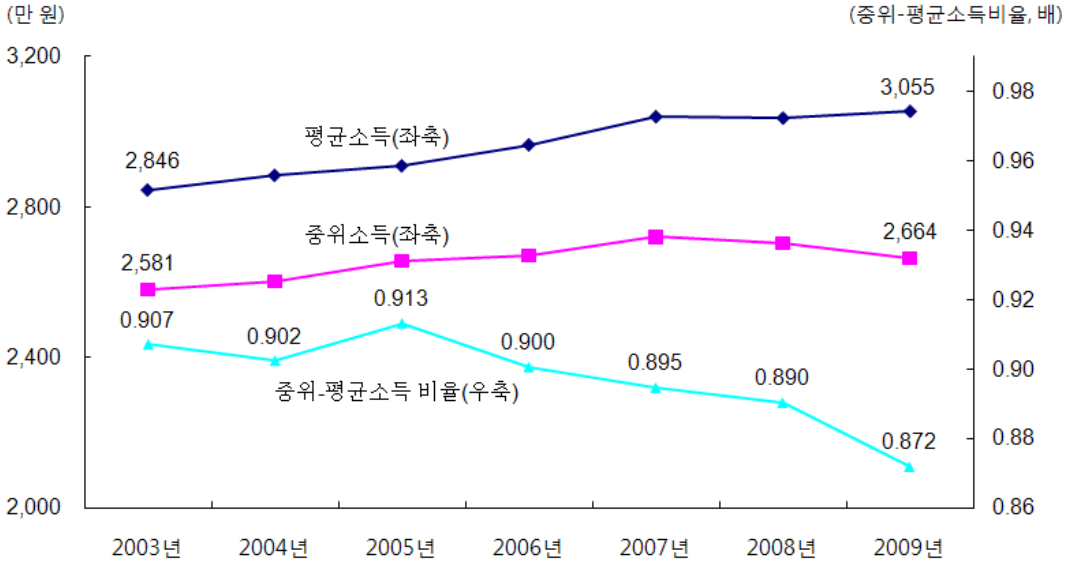
□ 중위소득이 평균소득 증가율에 못 미쳐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3~2009년 중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 평균소득은 7.4% 상승하였으나 중위소득은 3.2% 상승에 그쳐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은 0.91에서 0.87로 3.9% 하락

37)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로서 비율이 낮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화

· 중위소득 2003년 2,581만 원 → 2009년 2,664만 원
· 평균소득 2003년 2,846만 원 → 2009년 3,055만 원

2003~2009년 중위 대 평균 소득 비율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003~2009년 중위소득, 평균소득 및 중위 대 평균소득 비율

(단위: 만 원, %)

연도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평균 소득 비율
2003년	2,581	2,846	0.907
2004년	2,603	2,885	0.902
2005년	2,657	2,910	0.913
2006년	2,671	2,966	0.900
2007년	2,720	3,041	0.895
2008년	2,704	3,037	0.890
2009년	2,664	3,055	0.872
증가율(%)	4.77	6.67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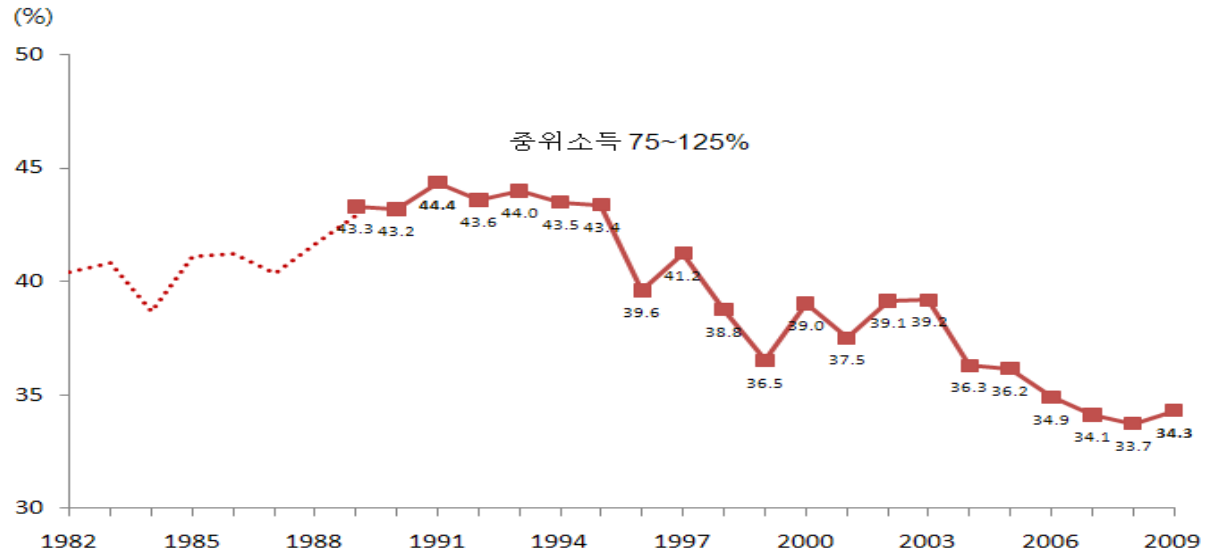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실질처분가능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중산층 내부에서도 핵심 중산층의 비중과 소득이 집중적으로 하락

□ 1982~2009년 중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2003~2009년 중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3개 그룹(50~75%, 75~125% 및 125~150%)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75~125%에 해당하는 핵심 중산층 가구의 비중과 이들의 소득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1982~2009년 기간 동안 중위소득 50~75%와 125~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각각 5.0%p와 2.8%p 하락한 반면, 중위소득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 비중은 10.6%p 하락
  · 75~125% 중산층 근로자 가구 비중은 동 기간 중 가장 높았던 1991년 44.4% → 2009년 34.3%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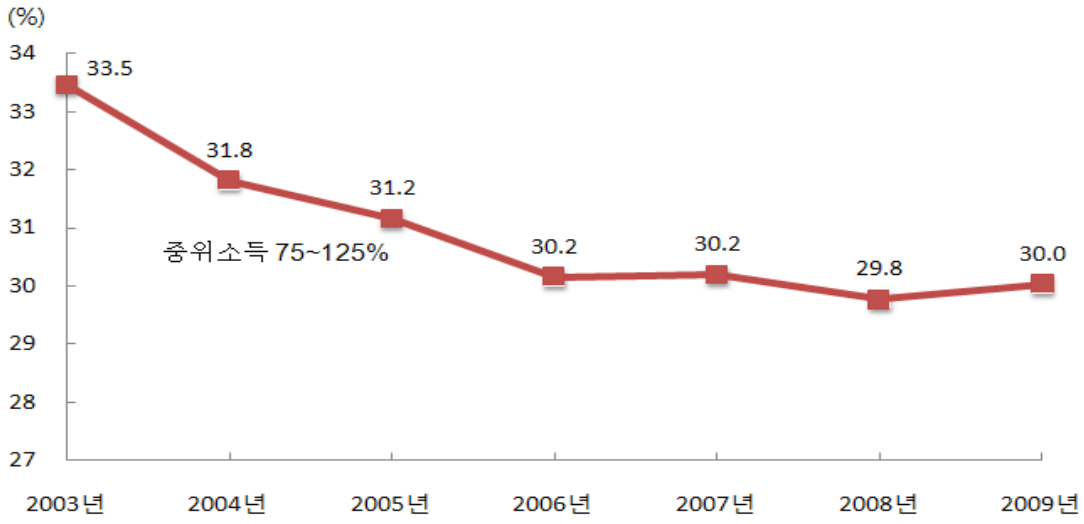
1982~2009년 중산층 근로자 가구 내부의 가구 비중 변화



주: 1)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2) 1989년 이전 자료는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82~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2003~2009년 기간 중 중위소득의 50~75%와 125~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전체 가구(비임금근로자 가구 포함)의 비중은 각각 1.1%p와 0.4%p 하락한 반면, 중위소득의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3.4%p 하락
  · 75~125% 가구 비중은 2003년 33.5% → 2009년 30.0%

2003~2009년 중 중위소득 75~125% 가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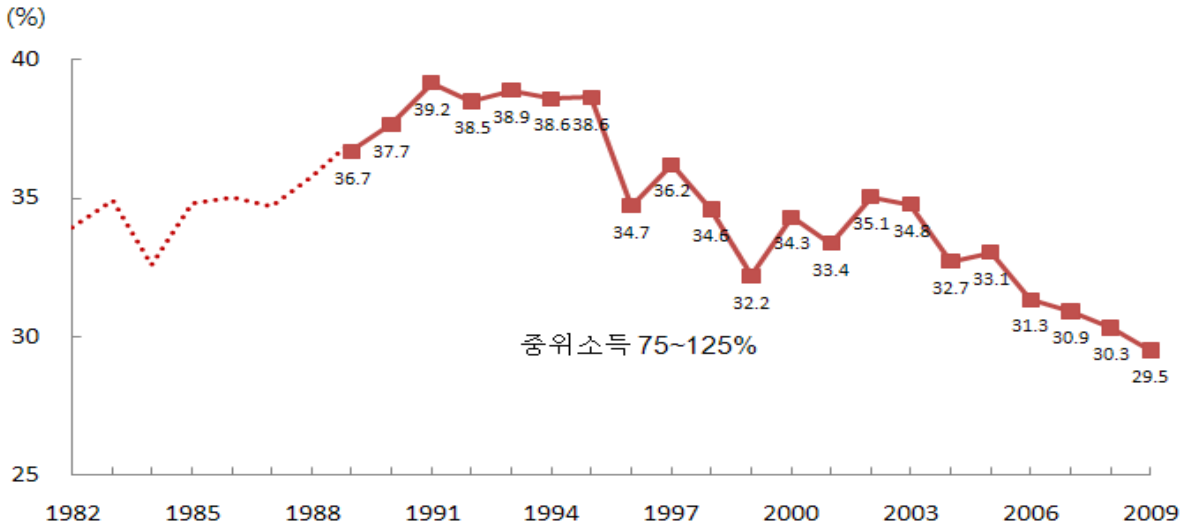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중산층 내에서도 핵심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중위소득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이 집중적으로 하락

- 1982~2009년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소득 중 중위소득 50~75%와 125~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은 각각 3.2%p와 3.5%p 하락한 반면, 75~125%에 해당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소득 비중은 9.6%p나 하락
  · 75~125% 가구의 소득 비중은 동 기간 중 소득비중이 가장 높았던 1991년 39.2% → 2009년 29.5%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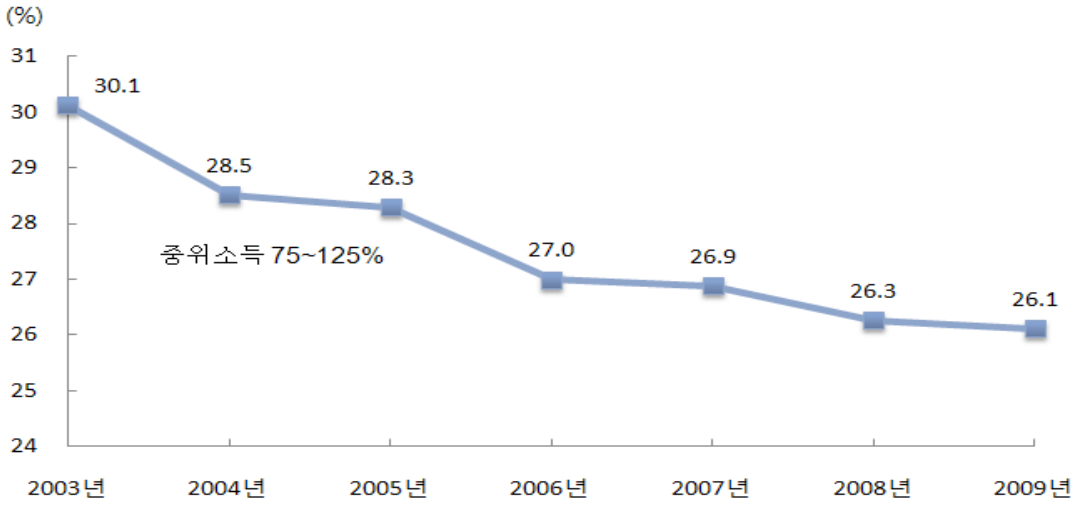
1982~2009년 중 중위소득 75~125% 근로자 가구의 소득 비중 변화



주: 1)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2) 1989년 이전 자료는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82~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2003~2009년 기간 중 중위소득의 50~75%와 125~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비임금근로자 가구 포함)의 소득 비중은 각각 0.9%p와 1.0%p 하락한 반면, 75~125%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은 4.0%p 하락
  · 75~125% 가구의 소득 비중은 2003년 30.1% → 2008년 26.1%

2003~2009년 기간 중 중위소득 75~125% 가구의 소득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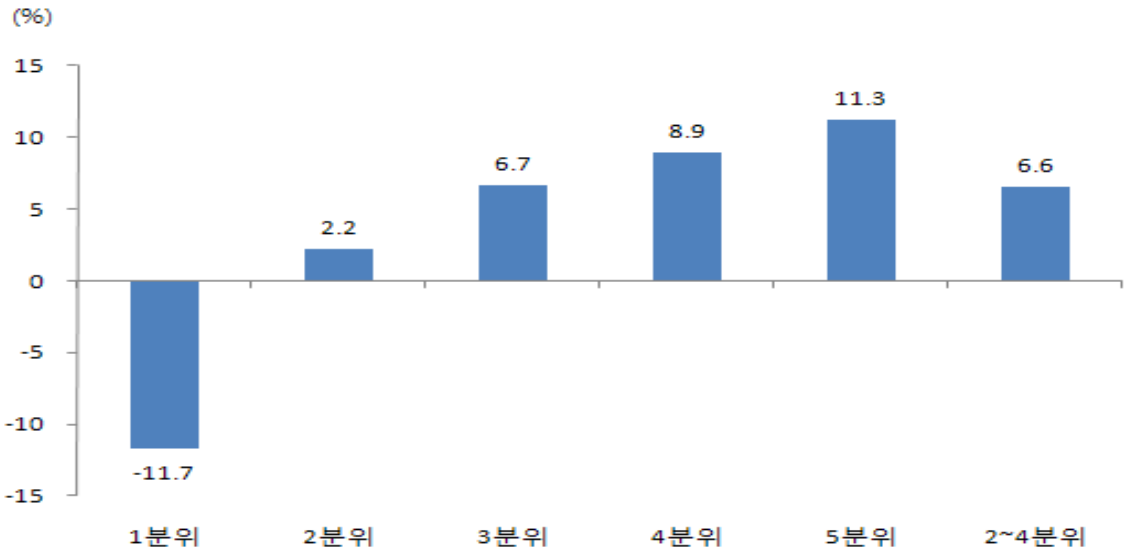


주: 2인 이상 전체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2003~2009년 기간 중 전체 가구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산층 내부의 소득격차 확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3분위와 4분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5% 이상 증가하였으나 2분위는 2.2%에 머물러 2분위와 4분위 사이의 소득증가율 차이는 6.7%p에 이름
  · 소득증가율은 2분위 2.2%, 3분위 6.6%, 4분위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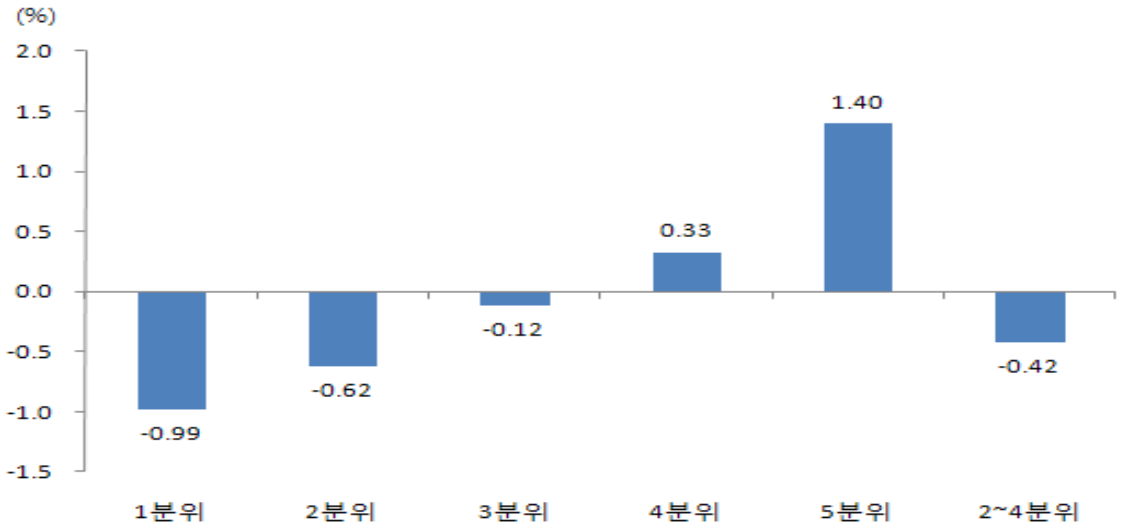
2003~2009년 5분위의 분위별 소득증가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4분위 소득 비중은 상승한 반면 2, 3분위 소득 비중은 하락하였으며 2분위 소득 비중의 감소폭은 3분위 감소폭의 5배를 초과
  · 소득 비중의 변화는 2분위 -0.6%p, 3분위 -0.1%p, 4분위 0.3%p

2003~2009년 5분위 분위별 소득 비중 변화



주: 2009년 분위별 소득 비중과 2003년 분위별 소득 비중의 차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금융위기는 중산층의 규모와 소득 비중에 부정적 영향

□ 외환위기 기간 중 중산층 가구 비중과 소득 비중의 감소폭이 그렇지 않은 기간의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38)]

- 외환위기가 포함된 1993~1998년 기간 중 중산층 가구 비중은 연평균 0.94%p(중위소득 50~150%)와 1.05%p(중위소득 75~125%) 감소한 반면, 1998~2003년에는 각각 0.56%p 감소, 0.08%p 증가

- 1993~1998년 사이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은 연평균 0.87%p(중위소득 50~150%)와 0.86%p(중위소득 75~125%) 감소한 반면, 1998~2003년에는 각각 0.56%p 감소, 0.04%p 증가

38) 1997~1998년 외환위기 기간 중 조기퇴직이나 실직 등의 사유로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변화는 추정된 변화의 크기보다 클 수 있음

중산층 가구의 비중 변화

(단위: %p, 연평균)

구분	중산층 가구 비중		중산층 가구 소득 비중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75~125%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75~125%
1993~1998년	-0.94	-1.05	-0.87	-0.86
1998~2003년	-0.56	0.08	-0.56	0.04

주: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93~2003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7~2009년 사이 중위소득이 2.1%p 감소했으며, 중산층 비중과 소득 비중도 소폭 감소

- 중위소득이 2.1% 감소했지만 평균소득이 0.5% 상승하여 중위-평균 소득 비율은 하락

- 중산층 가구 비율과 소득 비중도 모두 소폭 하락
  · 중산층 가구 비중은 각각 0.9%p(중위소득 50~150%)와 0.2%p(중위소득 75~125%) 감소하고, 중산층 가구 소득 비중은 각각 1.3%p(중위소득 50~150%)와 0.8%p(중위소득 75~125%)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산층 가구의 변화

(단위: %, 만 원, 연평균)

연도	중위소득	평균소득	중위-평균 소득 비율	중위소득 50~150% 가구 비중	중위소득 75~125% 가구 비중	중위소득 50~150% 소득 비중	중위소득 75~125% 소득 비중
2007년	2,720	3,041	0.895	56.41	30.20	49.40	26.88
2008년	2,704	3,037	0.890	55.49	29.76	48.40	26.26
2009년	2,664	3,055	0.872	55.52	30.03	48.12	26.1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7~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국제 비교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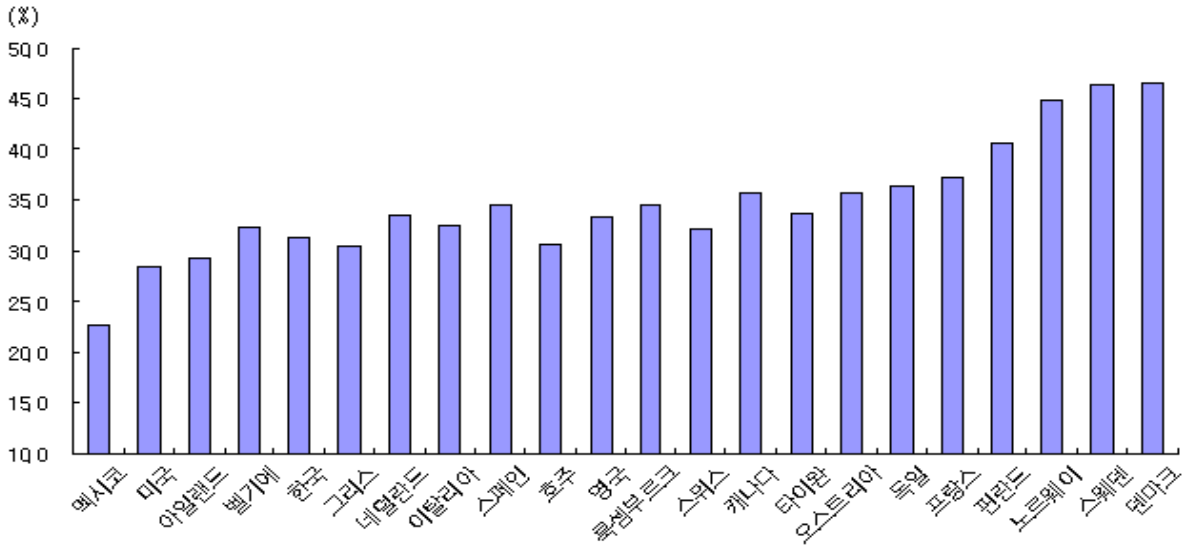
□ 한국은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75~125%에 속하는 핵심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OECD 21개국 중 16번째

- 한국은 2006년 현재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가구소득(약 2,570만 원)의 75~125%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3%로 OECD 평균 34.7%를 하회

- 중산층 비중은 미국이 최하위권인 반면,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제 평균에 가깝거나 이를 상회하는 등 영미권 국가 간에도 큰 차이가 존재
  ・2004년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중산층 비중 격차는 7.2%p

-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4개국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40.7~46.7% 수준으로 중산층이 가장 두터운 사회임을 입증

핵심 중산층 가구 비중 (75~12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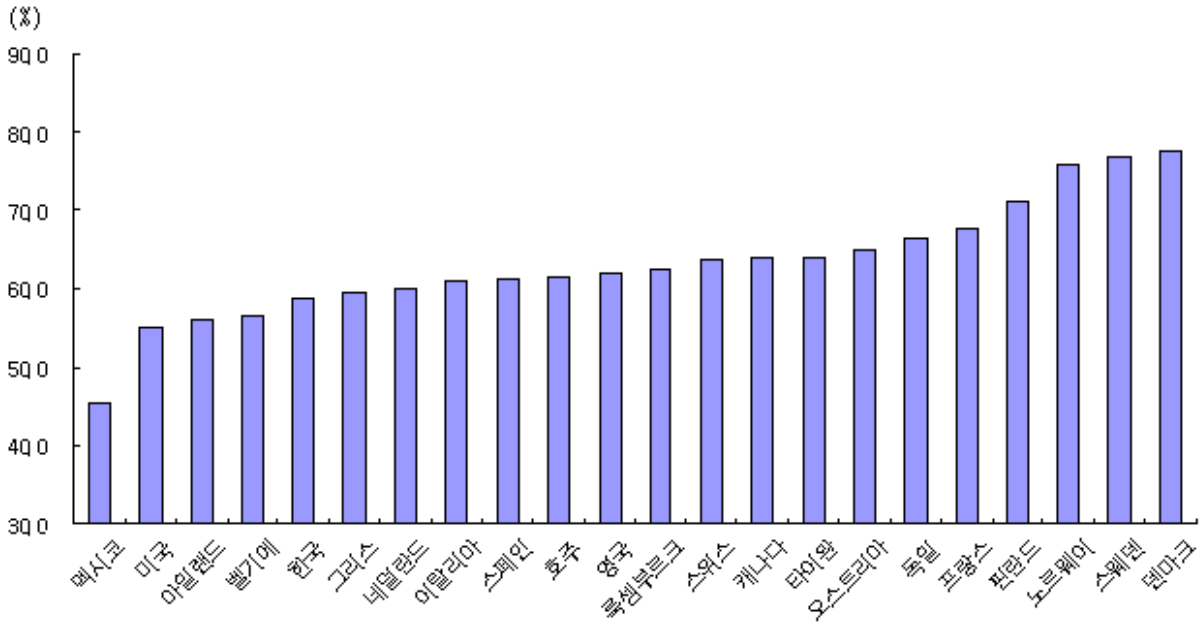
주: 1)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75~125%를 중산층으로 정의
2)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조정
3) 네덜란드는 1999년 기준;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2000년 기준; 스위스는 2002년 기준; 호주는 2003년 기준;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는 2004년 기준; 스웨덴은 2005년 기준; 한국은 2006년 기준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를 토대로 재작성

□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할 경우에도 한국은 여전히 OECD 하위권에 위치

- 2006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전체 가구의 58.9%로 OECD 21개국 중 17위
  -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45.4%), 미국(55%), 아일랜드(56%), 벨기에(56.5%)의 4개국에 불과

- 북유럽 및 중부 유럽 국가들의 중산층 비중이 OECD 평균(63.2%)를 넘는 것으로 확인

중산층 가구 비중 (50~150% 기준)



주: 1)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
2)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조정
3) 네덜란드는 1999년 기준;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2000년 기준; 스위스는 2002년 기준; 호주는 2003년 기준;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는 2004년 기준; 스웨덴은 2005년 기준; 한국은 2006년 기준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를 토대로 재작성

각국의 중산층 비중(단위: %)

국가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75~125% 기준	처분가능중위가구소득의 50~150% 기준	해당연도
멕시코	22.7	45.4	2004
미국	28.5	55.0	2004
아일랜드	29.2	56.0	2000
그리스	30.4	59.6	2000
호주	30.6	61.3	2003
한국	31.3	58.9	2006
스위스	32.1	63.6	2002
벨기에	32.3	56.5	2000
이탈리아	32.5	60.9	2000
영국	33.3	62.1	2004
네덜란드	33.4	59.9	1999
스페인	34.5	61.2	2000
룩셈부르크	34.5	62.7	2004
캐나다	35.7	64.0	2004
오스트리아	35.8	64.9	2000
독일	36.3	66.4	2000
프랑스	37.3	67.7	2000
핀란드	40.7	71.2	2004
노르웨이	44.9	75.9	2004
스웨덴	46.5	76.9	2005
덴마크	46.7	77.5	2004
평균	34.7	63.2	

□ 한국은 중산층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포의 우편향성(right skewness)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중위소득 대 평균소득 비율(median-to-mean ratio)'은 소득분포가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
  -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클수록 소득분포가 오른쪽(상위소득계층)으로 기울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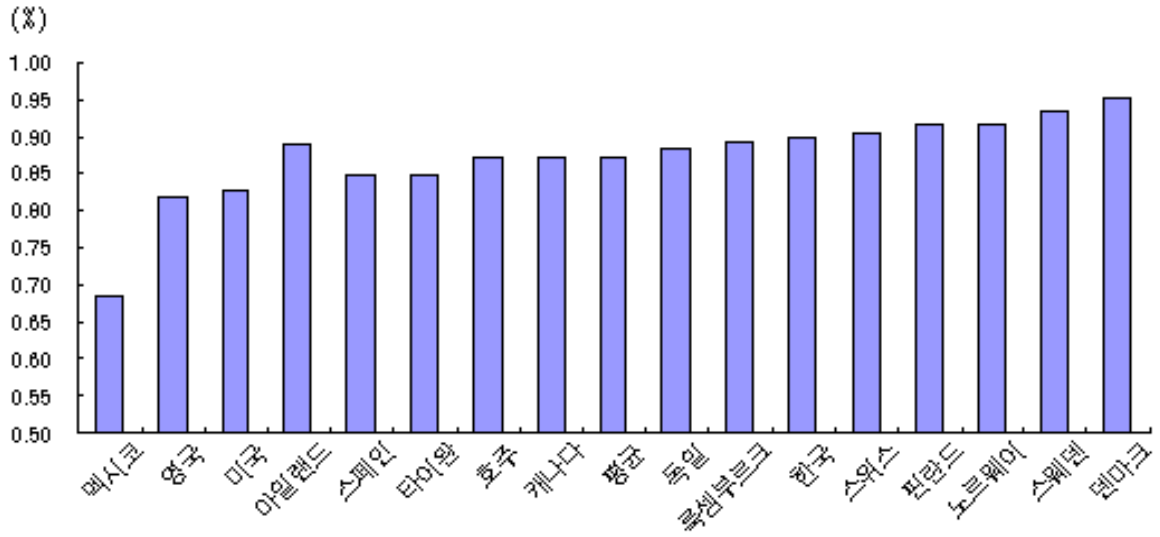
- 한국은 2006년 현재 중위소득 대 평균소득 비율이 0.898로 조사대상 1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

- 다른 국가에 비해 중간소득계층에 속한 가구 수는 적은 편이지만, 소득분포에서 최상위층을 나타내는 우측 꼬리가 비교적 얇은 편임을 시사[39]

39) 확률분포곡선에서 우측 꼬리가 두꺼울수록 평균값이 중간값보다 커짐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한국은 4.79%인데 반해, 한국보다 중산층 비중이 높은 캐나다는 4.92% (미국은 7.15%)[40]

중위소득 대 평균소득의 비율



주: 처분가능가구소득 기준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Inequality & Poverty Key Figures.

3. 한국 중산층의 특성

중산층은 하위계층보다 근로소득이 많고 남성 장년 가구주가 많음

□ 중산층은 여타 계층에 비해 근로소득 비중이 높고, 금융・부동산 소득 및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음

- 한국 노동패널 4차년도(2001년)~10차년도(2007년) 자료를 분석하여 중산층의 소득 구성을 분석
  ・노동패널은 4차년도 이후 원 표본 유지율이 76~77%로 모집단이 균질적으로 유지되어 장기적 추세를 분석하기에 용이[41]

40)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를 토대로 재작성
4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2009).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 2001~2007년 7개년도 표본 내 가구 총소득[42]이 중위소득의 50~150%인 계층과 75~125%인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

- 중위소득 50~150% 계층은 소득의 88.5%, 75~125% 계층은 소득의 89.8%를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상위계층과 유사
  · 하위계층은 소득의 28.7%(중위소득 75% 이하)와 40.7%(중위소득 50%)를 이전소득에 의존
  · 상위계층은 소득의 6.8%(중위소득 125% 이상)와 5.6%(중위소득 150% 이상)를 부동산 소득과 상속/증여를 포함한 기타소득에 의존[43]

소득계층별 소득 구성 비교 (2001~2007년 평균)

(단위: %)

구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가구 비중
50% 이하	47.9	2.1	4.0	4.5	40.7	0.9	21.1
50~150%	88.5	1.1	2.1	3.4	3.9	1.0	48.0
150% 이상	88.7	1.4	4.2	1.4	1.8	2.6	30.9
75%이하	60.5	1.9	3.4	4.6	28.7	0.9	33.3
75~125%	89.8	1.1	2.2	3.3	2.8	0.9	26.2
125% 이상	89.9	1.2	3.6	1.5	1.8	2.0	40.5

주: 1) 각 소득 항목의 기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고, 총소득이 0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2) 민간 보험 수령액은 기타소득에 포함
3) 이전소득은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을 모두 포함
4) 저소득층은 농업 종사자가 많은데, 이들은 도지료 수입이 있어서 부동산 소득 비중이 높음

- 중산층의 부동산 및 금융 소득의 비중이 낮은 현상은 금융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금융소득의 혜택을 보기 어려움을 시사
  · 실제로 표본 내[44] 중산층 중 금융소득을 취득한 가구는 7.4%(50~150%), 7.2%(75~125%), 부동산소득을 취득한 가구는 6.4%(50~150%), 6.4%(75~125%)에 불과

42) 총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합이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처리.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계산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2009).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따름
43) 2001~2005년 자료의 기타소득은 보험금, 퇴직금, 증여, 상속, 기타로 구성되며 2006~2007년에는 축의금, 당첨상금, 상금, 재해보상금을 추가
44) 가중치를 주지 않은 값

□ 중산층 가구는 하위계층에 비해서 가구주가 남성-대졸자-장년층인 가구가 많고, 상위계층에 비해서는 여성-고졸자 가구주가 많음

- 중산층 가구 중 여성 가구주 비중은 11.1%(75～125%), 13.1%(50～150%)로 하위계층의 1/3～1/4, 상위계층의 2배 수준

- 중산층 가구 중 대졸 이상 학력 가구주의 비중은 28.9%(50～150%), 29.6%(75～125%)로 상위계층의 3/5, 하위계층의 2배 수준

- 중산층 가구주 평균연령은 47.2세(50～150%), 46.6세(75～125%)로 상위계층과 유사하나 하위계층보다는 9～11세 낮음

소득계층별 가구주 인적자본 비교 (2001~2007년 평균)

구분	여성 가구주 비중(%)	대졸이상 가구주 비중(%)	평균연령 (세)	구분	여성 가구주 비중(%)	대졸이상 가구주 비중(%)	평균연령 (세)
50% 이하	40.0	14.8	58.4	75% 이하	33.5	17.0	55.3
50~150%	13.1	28.9	47.2	75~125%	11.1	29.6	46.6
150% 이상	6.0	49.7	47.5	125%이상	6.8	45.3	47.0

주: 가구주가 있는 가구만 포괄

- 중산층은 하위계층에 비해 근로소득 취득에 유리한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계층을 유지
  - 하위계층과 중산층의 총소득 격차는 근로소득 격차와 거의 일치하며, 금융, 부동산, 사회보험, 기타소득의 격차는 이전소득 격차를 상쇄

- 중산층과 여타 계층 간 격차를 분석[45]한 결과 근로소득이 높으면 하위계층보다 중산층에, 중산층보다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
  - 근로소득[46]이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하위계층보다는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24.4～41.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45) 중산층과 하위계층, 중산층과 상위계층 귀속 여부를 각각 이산종속변수 모형(Probit)으로 분석 (분석 내용은 부록을 참조)

46) 인구 특성, 교육 수준, 빈곤층 소속 유무,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지역의 영향을 반영한 근로소득 추정치로서 실제 임금과 이 추정치의 격차는 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특성 이외의 제도적 임금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 (추정 방식 및 결과는 부록을 참조)

・근로소득이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중산층보다는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28.6~4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 구성비 (2001~2007년 평균)

(단위: %)

구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중산층: 50~150%)						
중위-하위	100.9	0.8	1.4	2.8	-7.0	1.0
상위-중위	77.8	2.0	11.5	0.2	1.7	6.8
(중산층: 75~125%)						
중위-하위	101.2	0.8	1.6	2.5	-7.1	1.0
상위-중위	79.3	1.8	11.1	-0.1	1.8	6.2

주: 1) 각 수치는 항목별 소득격차/총소득 격차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
2) 중산층의 이전소득은 하위계층의 이전소득보다 적고, 상위계층의 이전소득보다도 적은데, 이는 하위계층은 공공 이전소득이 크고 상위계층은 민간 이전소득이 크기 때문

4. 중산층 감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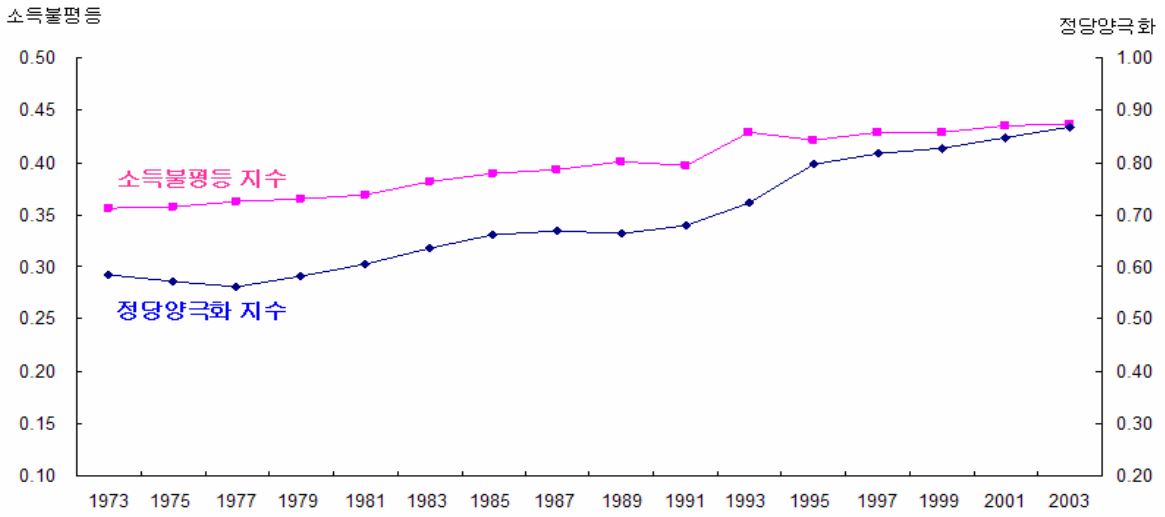
(1) 정치사회적 측면

중산층 비중의 축소는 사회갈등을 유발

□ 중산층의 감소는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양극화를 통해 정당 간 갈등을 심화

-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공화・민주 양당 내에 온건파 의원 수가 감소하고 양당 간 이념적 거리가 확대되는 추세
・지니계수로 측정한 경제 양극화 수준과 정당 간 정치 양극화 지수 사이에는 0.96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미국의 소득불평등과 정치 양극화



주: 1) 소득불평등 지수는 지니계수를 사용
2) 정치 양극화 지수는 연방하원의 DW-NOMINATE Score를 사용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McCarty, N., Poole, K. & Rosenthal, H. (2006). *Polarized America*. Cambridge: MIT Press.

미국 정치의 양극화 지수

▷ 놀란 맥카티 교수(프린스턴大), 키스 풀 교수(UC샌디에이고), 하워드 로젠탈 교수(NYU)는 미국의 정치 양극화를 측정하기 위해 DW-NOMINATE 지수를 개발
-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의 기명투표를 전수 조사하여 의원 개인의 이념적 포지션을 진보와 보수의 좌표 위에 배치 (-1은 가장 진보적, 1은 가장 보수적)
- DW-NOMINATE 지수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간 이념적 차이의 평균값으로 0과 1사이에 분포

자료: McCarty, N., Poole, K. & Rosenthal, H. (2006). *Polarized America*. Cambridge: MIT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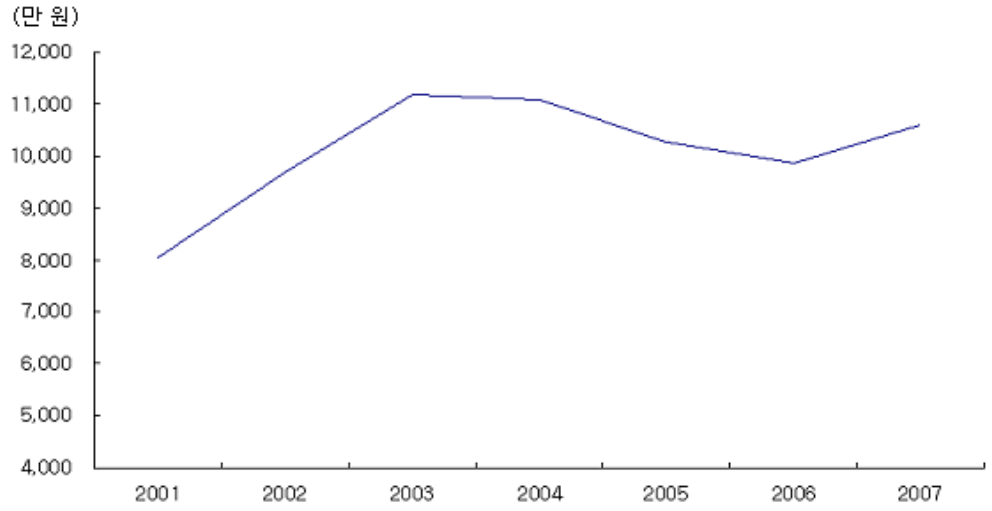
- 미국 정치의 양극화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체성이 각각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고착화되어 주요 입법에 대한 초당적 합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있음
  - 연방 상원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의사진행방해(Filibuster)[47]를 받은 비율이 1960년대 8%에서 1980년대 27%로 증가했고, 공화당이 소수당이 된 제110대 의회(2007~2008년)에서는 70%로 급증[48]

47) 고의로 토론을 계속함으로써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는 행위로 미 연방 상원은 소수파 보호를 위해 60인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필리버스터링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규정
48) Schlesinger, R. (2009. 11. 25.). The Staggering Rise of the Filibuster. *U.S. News & World Report*.

□ 舊중산층인 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불안이 증가하면서 상위계층과의 갈등이 심화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대표적 舊중산층인 자영업자 계층이 몰락하는 추세
  -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자영업의 연간 평균 실질매출액은 2003년 1억 1,180만 원에서 2007년 1억 587만 원으로 감소
  - 경영난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의 퇴출로 2002~2007년 사이에 자영업자 수는 14.1만 명 감소[49]

자영업자의 평균 연간 매출액 추이



주: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실질 매출액
자료: 금재호 외 (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Ⅰ)." 한국노동연구원. pp. 145~146.

- 하지만 자영업 내부의 계층 분화가 심각하여 매출액이 일부 대형 자영업에 집중
  - 2001~2007년 사이 자영업의 평균(mean) 매출액은 1억 96만 원이지만 중간(median) 매출액은 3,599만 원에 불과[50]

- 지역상권에 진입하려는 대형유통자본과 토착 영세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

49) 통계청, KOSIS.
50) 금재호 외(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Ⅰ)." 한국노동연구원. pp. 145~146.

- 舊도심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면서 보상비 문제를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극한갈등이 표출

(2) 경제사회적 측면

□ 한국의 중산층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워짐

- 중산층 축소가 심화되기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조세, 교육 등 여러 정책에서 소득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커지는 양상이 두드러짐

- 양보가 없는 계층, 이념, 지역 간 대립이 정책합의를 어렵게 하여 안정된 성장을 방해
  - 계층 간 갈등이 이념 및 지역 갈등과 맞물려 특정 정책에 대한 대립으로 발현

□ 결국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거래비용이 발생

- 거래비용은 필요한 정책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내용이 수정 혹은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발생

-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정책이 정치적 이유로 시행될 때도 거래비용이 발생

□ 부동산 정책의 경우 계층 간 갈등을 고려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지연[51]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들이 정치적 여건에 따라 자주 변경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4차례에 걸쳐 폐지, 재도입, 강화, 완화를 반복

51) 박재룡 외 (2009).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추진방안"(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부동산 대책 중 법률 개정 등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이한 사회계층의 입장을 대변한 정치권 내 시각 차이로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

□ 외고 폐지가 사교육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표출

- 소득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높은 사교육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무엇이 올바른 교육정책인지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

- 외고 폐지를 지지하는 주장: 외고가 본래 목적을 상실하여 사회에서 타이틀이 되고 기득권층을 이룬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킴
  ・외고는 명문대 입시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사교육 시장의 열기를 부채질

- 외고 유지를 지지하는 주장: 평준화시대에 우수학생 발굴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 양성에 필요
  ・외고 폐지는 현 정부의 교육적 다양성에 배치

-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정원을 30% 줄이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은 분명

Ⅳ. 정책 쟁점과 방향

1. 주요국의 중산층 대책

美國: 고용 창출과 가계비용 절감을 통해 중산층 복원을 추진

□ 미국은 중산층 가구 수와 소득점유율이 줄어들며 소득불균형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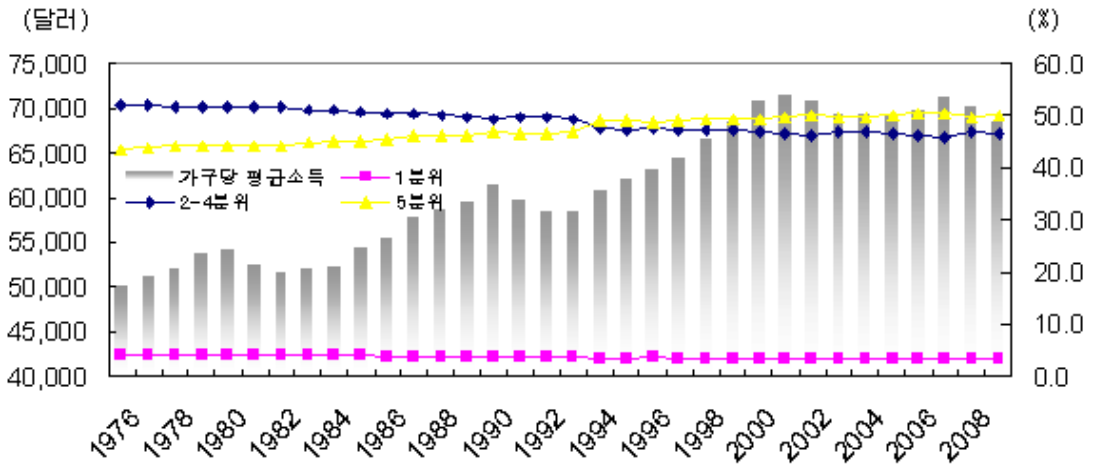
- 지난 20년간 평균소득 및 중위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중산층 규모는 1.4%p 이상 감소

구분	1989년	1999년	2009년
평균소득(Mean Income)	57,772달러	66,722달러	68,409달러
중위소득(Median Income)	45,921달러	48,934달러	52,204달러
중산층 규모	44.49%	43.79%	43.07%

주: 1) 중산층 구간은 중위소득의 50~150%
2) 2009 CPI Index=100
자료: U.S. Census Bureau, CPS 추계.

- 소득점유율에서도 5분위(상위 20%)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2~4분위(소득구간 20~80%)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상위 20%가 전체 가구소득의 50%를 점유(2008년 기준)

美 가구당 평균소득 및 5분위별 소득 비중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Incom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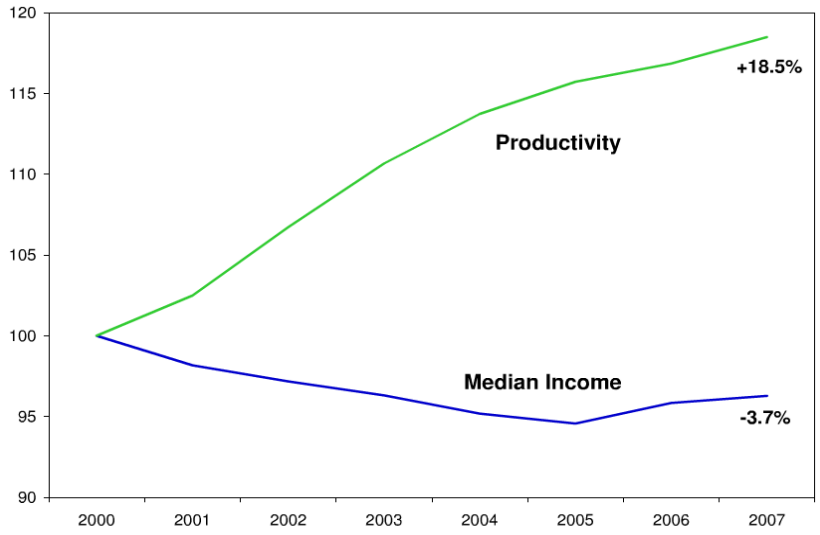
□ 오바마 집권 이후 중산층 복원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결

- 중산층 복원을 위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 태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on Middle Class Working Families)를 구성
  · T/F에는 노동·보건·교육·상무·에너지장관 등 내각 각료와 국가경제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등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다수 참여

- T/F는 중산층 보호를 위해 교육, 노동, 소득 부문의 5대 사업목표를 천명
  · 교육 및 평생훈련의 기회 확대, 일과 가정의 균형 제고, 작업장 안전을 포함한 공정근로의 증진, 중산층과 근로가정의 소득 보전, 노년층의 사회안전망 제고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득이 경제성장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격차(gap)를 좁혀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생산성은 18.5% 개선된 반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 중간값은 3.7% 감소

美 생산성과 근로자 가구 소득(중간값) 개선 추이



주: 노인 제외 시간당 중위소득과 생산성(2000년도 지수 100 기준)

자료: Middle Class Task Force (2009).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Helping Middle-Class Families(MCTF Staff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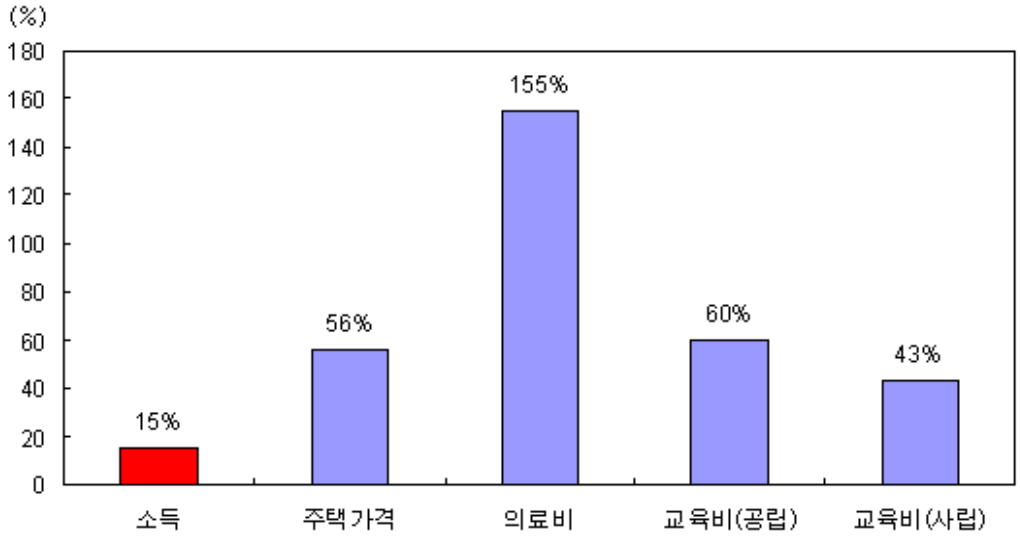
- 2009년 2월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통과되면서 중산층 T/F가 긴급 경기 처방과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 집행을 주도

□ 오바마 행정부와 T/F는 '열망'과 '비용'의 관점에서 중산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52)]

- 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개념적 접근들을 보완하여 중산층을 라이프스타일(lifestyle)과 관련한 '열망'의 개념으로 재인식
  · 주택과 차량 소유, 자녀들의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그리고 가족 휴가 6가지의 열망을 중산층의 조건으로 인식

- 각각의 열망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소득보다 빨리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
  ·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가구당 평균소득은 15%가 증가한 반면, 주택비용과 의료비 등 생활비용은 40~150% 이상 증가

美 가구당 평균소득과 주요 생활비용의 증가폭(1990~2008년)



자료: U.S. Census Bureau, Income Statistics.;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0). Middle Class in America.

52)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0). Middle Class in America.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고용창출과 교육 촉진을 통한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 제고를 도모

- 「경기부양법안」이 시행되면 2010년까지 350만 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1.8%p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신규 고용을 통해 가구당 평균 2.3%의 소득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녹색산업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천명
  · 스마트 그리드, 그린빌딩 등 녹색기술에 대해 540억 달러를 투자
  · 5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근로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
  · 학자금 상환액이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제[53]

□ 총 2,320억 달러 규모의 세제혜택을 통해 중산층의 '비용'을 경감하고 직·간접적인 소득 보전을 추진

- 오바마 행정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중산층이 되기 위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

- 근로장려세액공제("Making Work Pay" tax credit)를 신설,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최고 400달러의 세액환급을 추진
  · 근로장려세액공제로 향후 10년간 총 1,160억 달러의 조세지출이 발생(경기부양 예산의 약 15%)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양육비세액공제(CTC), 교육비세액공제(AOTC) 혜택을 확대

53) 한국의 경우 급여 중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초과분의 20%를 매월 상환

- EITC: 3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세액공제 증가율을 45%로 높이고 공제 상한액을 5,657달러로 상향
- CTC: 연소득 8만 5,000달러 미만 가구의 공제액을 약 2배로 상향 조정
- AOTC: 공제한도를 1,8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

□ 중산층의 '열망'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

- 「의료보험 개혁안」이 2009년 12월 상원을 통과
  - 25인 이상 기업의 직원 의료보험을 의무화하고 부부 합산 3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재정을 마련
  - 2019년까지 3,700만 명에게 신규 보험혜택을 제공해 보험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릴 예정

- 아동보육(Child Care)과 노인 부양(Elder Care) 지원을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경제활동 참여 여력을 제고
  - 아동보육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을 확대, 24만 명 규모의 신규 수혜자를 확충
  - 노인부양 지원으로 약 20만 명의 근로자에게 총 300만 시간에 달하는 부양시간 경감을 추진

- 자동개인연금계좌제도(Auto IRA)를 확대해 퇴직 고령인구의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

英國: 사회이동성 개선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주력

□ 영국은 중산층 대책의 핵심을 사회이동성 개선에 두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

- 고든 브라운 前 총리 시절 사회이동성 향상은 더 나은 일자리 보장과 이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영국정부의 핵심 의제로 대두
  - 영국 근로자의 사회이동성은 1980~1990년대에는 하락하다가 200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 진보에 집중하고, 내수시장보다는 세계시장을 미래의 사회이동성 증대의 발판으로 선정
  - 저탄소 녹색기술시장에서 창출되는 고급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

-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교육예산이 약 60% 증가

□ 중산층 복원을 위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에 주력

-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근로를 고취하기 위해 1997년부터 '근로연계형 복지 프로그램'인 뉴딜 정책을 추진[54]
  - 근로자 1인당 임금 60~70파운드, 교육비 750파운드를 지원하는 대신, 고용주는 최소 26주의 근로기간을 보장

중산층 복원을 위한 英國의 '뉴딜정책'

- 1990년대 후반, 실업 복지에 대한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英國 노동당이 추진
- 청년실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중년층, 장년층 등 연령대별 프로그램과 편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추진
- 구직을 위한 개인별 고용상담과 함께 임금 및 취업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지난 10년간 뉴딜계획을 통해 185만 명이 구직에 성공했으며, 실업급여 신청자가 1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평가

-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재도입하고 다양한 세금공제를 시행
  - 차상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저소득층의 임금 보전을 위해 1999년 최저임금제를 재도입하며 임금조건을 개선
  -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서 근로에 참여할 경우, 아동세금공제(CTC)와 근로세금공제(WTC)를 통해 소득보전을 추진

54) 하세정 (2009). "영국 뉴딜정책 시행 10년: 평가와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68-73.

日本: 취약계층 근로 지원과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중산층 복원을 추진

□ 일본은 소득격차 완화 정책들을 앞세워 중산층 복원을 간접적으로 도모

-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일본이 견지해온 '전 국민이 중산층'이란 의미의 '1억 총중류(1億 總中流)' 의식이 와해[55]
  - 지니계수가 1990년 0.433에서 2002년 0.498로 악화
  - 최저생활비 수급자도 1995년 60만 세대에서 2000년 중반 이후 100만 세대로 급증

- 중산층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소득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취약계층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해 중산층으로의 계층 이동을 도모

- '재도전 지원 종합계획(2006)'을 통해 취약계층의 빈곤 극복을 추진
  - '몇 번이고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
  - 2007년 1,720억 엔의 예산을 책정해 청년층, 고령자 취업, 사업실패자 재도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

□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연계하여 소득격차, 중산층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도 발견

- 100만 명에 육박하는 25~34세 프리터[56]가 결혼을 미루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57]
  - '재도전 지원 종합계획(2006)'에는 장년프리터와 니트족[58], 단카이 세대(2007년에 60세) 퇴직에 대비한 지원방안이 포함

55) 양준호 (2007). "그 많던 일본의 중산층은 어디로 갔나-격차사회,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월간 말』, 255, 168-173.
56) 아르바이트 근로자
57) 마상열 (2007). "일본의 재도전 종합 지원계획"(해외정책동향 2007-1). 경남발전연구원.
58)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 인구감소 상황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향상에 초점[59]
  - 'Job Card 제도(직업능력 향상 시스템)'[60]와 '중소기업 향상 프로젝트'를 시행

□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

-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는 총 75조 엔 규모의 경제 부흥책을 추진
  - 빈곤층 보조를 위한 생활급부금(2조 엔), 중소기업 긴급 경영지원(4조 5,000억 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 새롭게 집권한 민주당은 경제우선 정책보다 복지, 가계 중심의 사회정책을 강조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천명
  - 월 2만 6,000엔(약 33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공립고교 무상교육,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 월 7만 엔의 최저연금 보장, 월 10만 엔의 직업훈련비 지급 등 일련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강화

2. 중산층 대책을 둘러싼 쟁점

(1) 근로소득 관련

근로소득에 따라 중산층 귀속 여부가 결정

□ 근로소득은 중산층과 하위계층, 중산층과 상류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생산성과 관계없는 제도적인 근로소득 격차도 중요 요인

- 근로소득이 1 표준편차 (0.54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중산층에 속할 확률은 22.2%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 중 가장 영향이 큼

59) 経済財政諮問會議 (2007). "経済財政改革の基本方針 2007".
60) 구직자의 직업경험을 기초로 기업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직업능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승계하는 제도로 훈련 중 급여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최근 2008년 시행된 제도는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고 구직자의 호응도 높지 않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기도 함

· 상류층에 속할 확률도 18.8% 증가하여 맞벌이의 영향을 나타내는 여성 가구주 더미 다음으로 큰 변화를 야기

- 사업체 규모, 보이지 않는 차별 등 생산성 이외의 근로소득 격차를 반영하는 근로소득 추정치 잔차도 4번째로 중요한 요인
  ·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1 표준편차 (0.532) 증가하면 12.7%, 상류층에 속할 확률이 1 표준편차 (0.490) 증가하면 14.4% 증가

각 변수의 1 표준편차 변화에 따른 중산층/상류층 귀속 확률 변화 (2007년 기준)

구분	중산층 확률변화	표준편차	구분	상위계층 확률변화	표준편차
근로소득	**22.2%*** **	**0.541**	여성 가구주 더미	21.2%***	1
금융소득 유무	15.9%**	1	**근로소득**	**18.8%*** **	**0.415**
가구원 수	13.9%***	1.28	기혼자 더미	15.8%***	1
근로소득 추정치 잔차	**12.7%*** **	**0.532**	**근로소득 추정치 잔차**	**14.4%*** **	**0.490**
기타소득 유무	12.3%**	1	금융소득 유무	12.3%***	1
대졸자 더미	11.3%**	1	주택가치	10.1%***	18.761
주택규모(평수)	10.5%***	15.188	월부채비용	10.0%**	121.294
아파트 더미	8.0%**	1	가구원 수	9.3%***	1.113
임대보증금	7.4%***	1	자가 외 부동산소유 더미	6.9%**	1
취학연령 자녀 수	-6.3%**	1	임대보증금	6.3%***	3.884
			취학연령 자녀 수	-5.5%***	0.964

주: 1) 더미 변수는 0에서 1로 변화할 때의 확률변화를 의미
2) *** 한계효과 추정치가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3%,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3) 중산층 소득 중 금융소득의 비중은 1.1%로 하위계층의 1.9%보다 낮으나 금융소득 수준이 높아 중산층과 하위계층 소득 격차의 0.8%는 금융소득에서 발생하고, 이 격차가 중산층에 속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시킴

□ 고용 여부보다는 근로소득의 크기가 상위계층 귀속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고용의 질이 중산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

- 근로소득의 효과를 제외할 경우 고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가짐
  · 질이 높지 않은 고용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키지만 이전소득을 감소시켜 중산층에 귀속될 확률과 하위계층에 귀속될 확률 간에는 중립적인 영향

· 상위계층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고용 여부보다는 질 높은 고용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이는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자영자는 중산층, 혹은 상위계층에 귀속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 실제로 노동패널 자료에서 임시직 및 일용직 고용 비중은 하위계층이 가장 높고 상위계층이 가장 낮음

- 또한 상위계층에 속할수록 사업장 규모가 커서 생산성 이외에 근로소득을 보호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음

· 단, 소득 50% 이하 하위계층이 종사하는 사업장 규모는 중산층의 사업장 규모보다 큰데, 하위계층은 사업장에서의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경우가 많아서 사업장 규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계층별 종사상 지위 분포와 근로소득 보호제도 수혜 여부 (2001~2007년 평균)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유노조 사업장	사업장 규모
50% 이하	33.0	25.8	39.9	7.0	225.5
50~150%	51.7	15.4	32.0	15.5	213.0
150% 이상	58.2	5.0	35.5	37.2	1035.0
75% 이하	38.1	23.4	37.4	8.2	141.1
75~125%	53.0	15.1	31.0	15.0	227.6
125% 이상	57.7	6.6	34.6	33.0	890.7

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자료.

□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높아서 중산층 보호가 어려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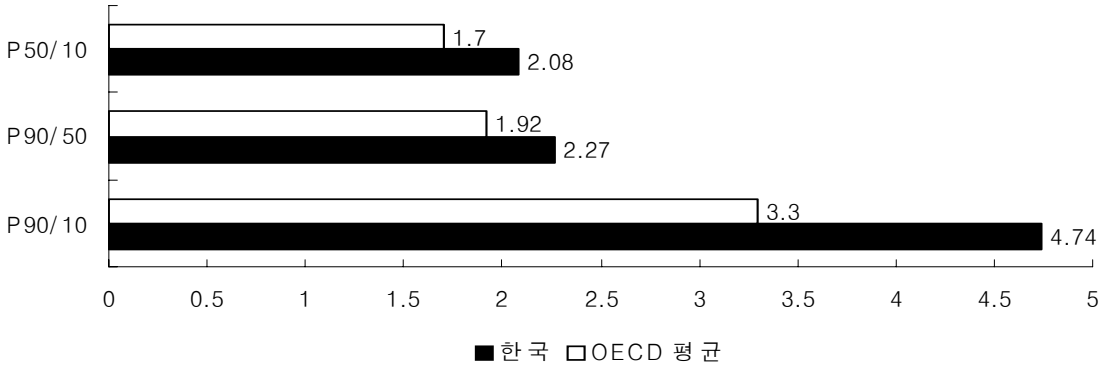
- 한국은 2007년 P90/10(90분위/10분위 비율), P90/50, P50/10 지수가 OECD 국가 내에서 높은 편이며, P50/10 격차는 2.08로 2.11인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61]

· 중위소득과 하위소득 간의 격차가 커 하위소득계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61) 한국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09). "근로소득 불평등도의 국제비교". 『노동리뷰』, 57호, 69-71.

· P90/50 격차도 OECD 국가 중 헝가리(2.34)와 미국(2.31)에 이어 3번째로 높은 2.27을 기록하여 중산층과 상위계층 간의 격차도 큰 편

근로소득 격차 비교 (2007년)



자료: 한국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09). "근로소득 불평등도의 국제비교". 『노동리뷰』, 57호, 69-71.

- 한국은 또한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25.6%로 고용의 질이 낮음
  · 임금 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2009년 현재 42.9%이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자 비중이 73.4%에 달함

- 중산층의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서 근로소득이 단절될 경우 소득 유지가 어려운 상황
  · 2008년 현재 전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85.5%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51.3%만이 고용보험에 가입[62)]
  · 특히 중산층(중위소득 75~125%) 임금근로자 중 12.7%가 속한 5인 미만 작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58.7%에 불과하고, 중산층의 32.0%를 차지하는 자영자는 고용보험 가입 불가

□ 중산층은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을 소득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자산으로 축적하기만 하여 근로소득을 보완할 소득원이 취약

- 금융소득이 존재하거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중산층일 확률이 높으나 활용 빈도가 낮아서 소득원 역할이 미비

62) 통계청, KOSIS.; 통계청 (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금융소득이 존재할 경우 중산층에 속할 확률은 15.9% 증가하나 중산층 중 금융소득을 취득한 가구는 7.2%에 불과
- 보유 아파트 평수가 표준편차 1단위만큼 높으면 중산층일 확률이 10.5% 증가하나, 부동산 소득 취득 가구는 6.4%에 불과

- 반면, 상위계층은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을 활용하여 근로소득을 보완
- 금융소득이 존재할 경우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은 12.3%p 증가하며 부동산 가치가 1 표준편차 증가하면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은 10.1%p 증가
- 상위계층 중 금융소득을 취득한 가구는 13.5%, 부동산소득을 취득한 가구는 12.4%로 금융 및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이용

근로소득 격차가 클수록 중산층 비중이 감소

□ 한국은 최상위계층과 중간계층의 근로소득 격차가 OECD 국가 중 헝가리와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

- 2008년 총 근로소득(gross earning)[63]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9개 구간으로 나눌 때 한국은 최상위(9분위)의 소득이 중간(5분위) 소득의 2.30배로 OECD 평균(1.93)을 상회
- 총 근로소득은 조세, 복지이전지출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분배에 개입하기 전에 발생한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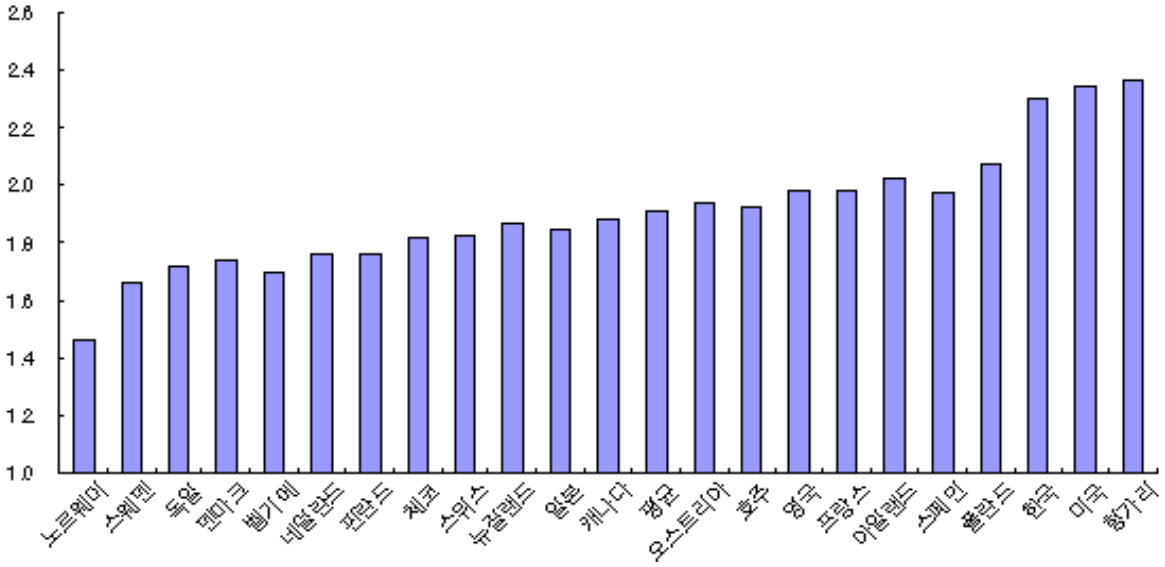
□ 각국의 근로소득 격차는 학력 격차 등 개인적 요인 외에도 그 나라의 노동시장제도와 산업구조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좌우

-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기업별로 분산된 단체협상구조는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 사이에서도 근로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64]

63)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통해 수취한 稅前 요소소득
64) Devroye, D. & Freeman, R. (2001). Does Inequality in Skills Explain Inequality of Earnings across Advanced Countries?(Working Paper 8140). NBER.

-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근로소득 격차의 주된 원인
  - 특히 고용형태보다는 사업체 규모가 노동시장 격차의 더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65]

근로소득 격차의 국제비교



주: 총 근로소득(gross earning) 기준 5분위 소득 대비 9분위 소득의 배율(p90/p50)
자료: OECD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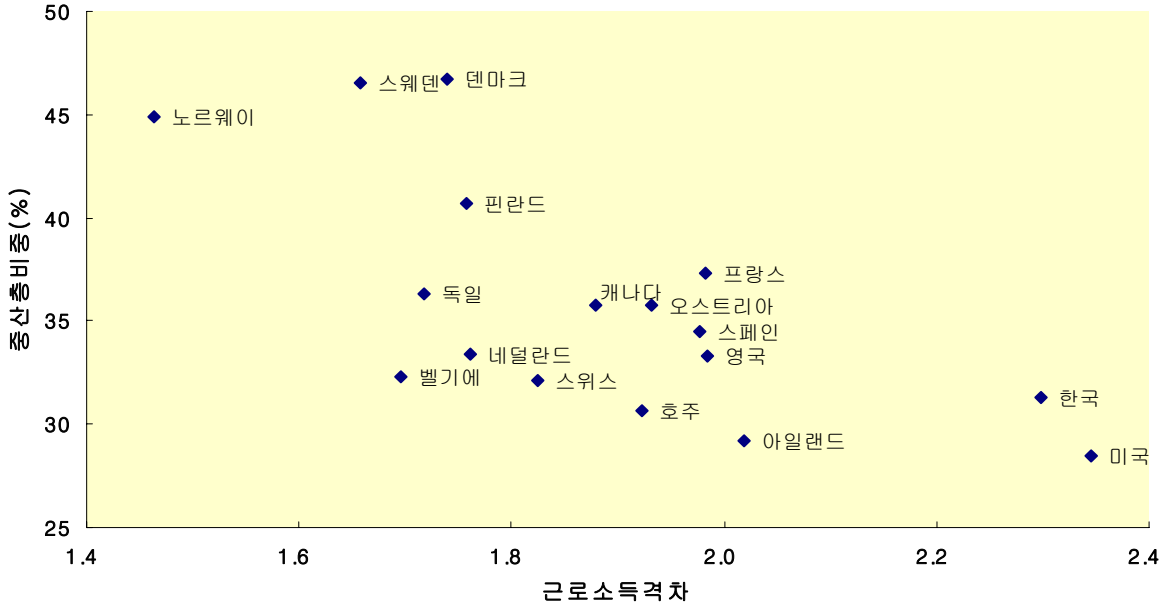
□ 각국의 중산층 크기는 노동시장에서 본원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 격차와 밀접한 연관

- OECD 17개국의 근로소득 격차와 중산층 비중 사이에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 (상관계수 = -0.63)

- 근로소득 격차의 축소가 중산층 비중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65) 정이환 (2007).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 분석". 『경제와 사회』, 73, 332-355.

근로소득 격차와 중산층 비중



주: 1) x축은 개인근로소득 기준 중간계층(5분위) 소득 대비 최상위계층(9분위) 소득의 배율, y축은 처분가능 중위소득의 75~125%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
2) 네덜란드는 1999년 기준;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2000년 기준; 스위스는 2002년 기준; 호주는 2003년 기준;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는 2004년 기준; 스웨덴은 2005년 기준; 한국은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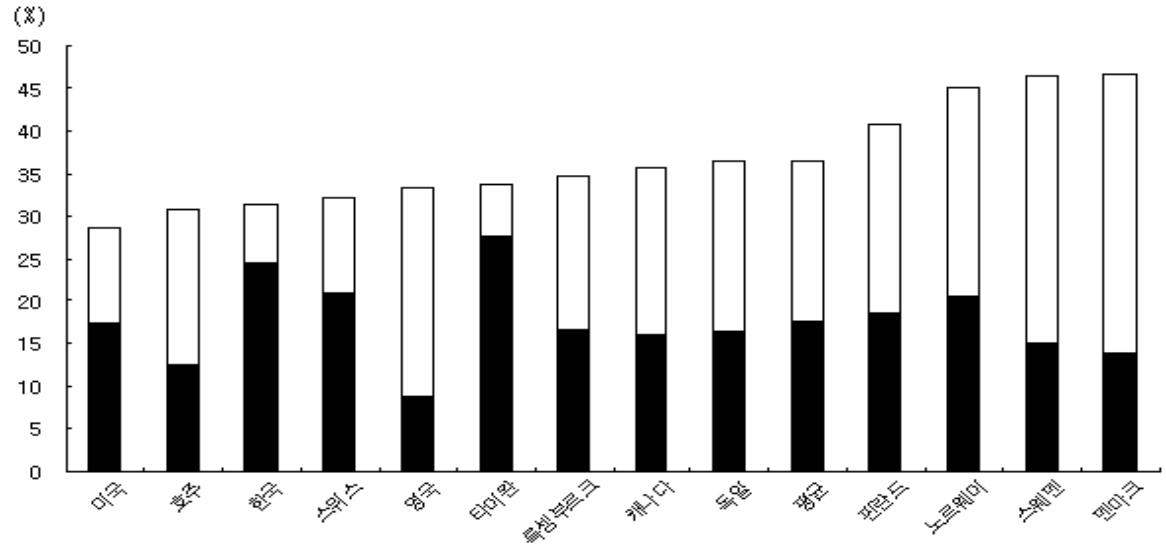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 SourceOECD, Statistics.

(2) 정부 역할인 이전소득 관련

□ 소득세, 사회복지지출 등 정부의 재정 작용이 중산층의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북유럽 등 일부 국가는 그 비중이 더욱 큼

- 처분가능소득 대신 노동소득, 자본소득 등 요소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24.5%로 북유럽 4개국 평균인 17.1%를 상회
  - 요소소득 기준 시 북유럽 4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중산층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대비 평균 27.6%p 감소한 반면 한국은 불과 6.9%p 감소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높은 소득세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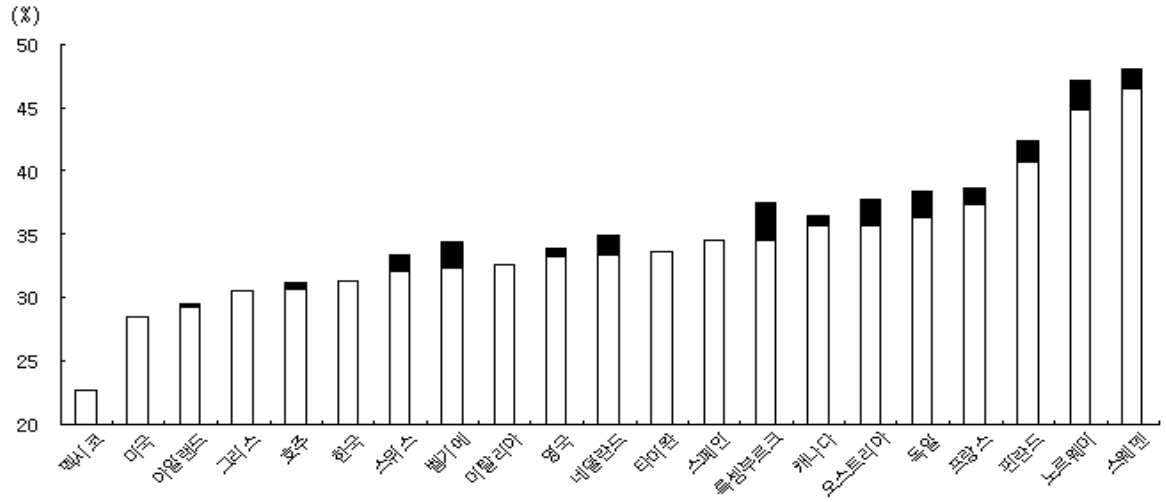
요소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각국별 중산층 비중



주: 1) 막대그래프 전체는 처분가능중위소득의 75~125% 기준 중산층 비중이고, 검은색 부분은 요소소득의 75~125% 기준 중산층 비중
2) 요소소득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를 토대로 재작성

- 처분가능소득에서 자녀양육비 지원, 출산급여 등 가족수당만 제외하더라도 북유럽 4개국의 중산층 비중은 평균 4.1% 감소
  - 반면 한국, 대만,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가족수당이 미미하여 이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중산층의 비중은 불변

가족수당과 중산층 비중



주: 막대그래프 전체는 처분가능중위소득의 75~125% 기준 중산층 비중이고, 검은색 부분은 처분가능소득에서 가족수당항목 제외 시 감소하는 중산층의 비중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를 토대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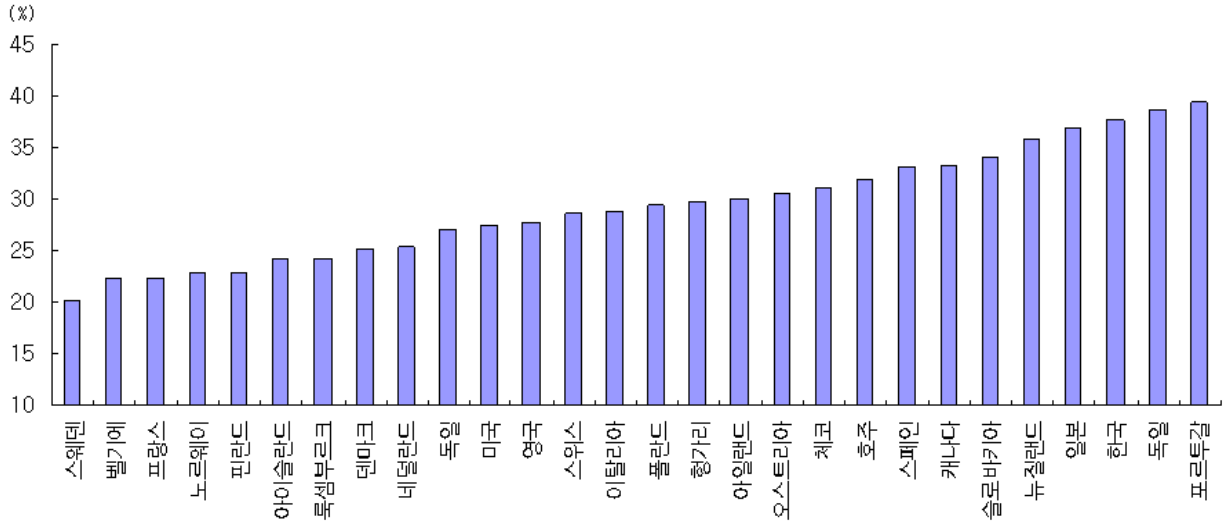
(3) 구조조정 관련

□ 한국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저부가가치화가 중산층 감소와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1997~2007년 사이 10~29인 중소기업의 월급여 총액은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86.2%에서 72.0%로 감소[66]

- 국내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 총 고용의 37.7%를 차지(OECD 29개국 중 3위)할 정도로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음
  - 서비스업 평균 종사자 수가 4인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이며 생산성도 제조업 대비 40% 수준에 불과[67]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 비중



주: 2006년 현재 서비스업 총 고용 대비
자료: OECD STAN DB

□ 선별적 구조조정, 기술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

66) 통계청, KOSIS.
67) 전경련 (2009).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 중소제조업에서 생산성이 낮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좀비(zombie) 사업체들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은 채무 재조정, 자산매각 등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회생

-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컨소시엄과 협력해 신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이전
  · 현재 정부는 연간(2009년 기준) 1.1조 원의 예산을 중소기업의 R&D 사업에 지원 중이나 대학과 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실적은 미흡

-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 업종의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를 완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자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

- 고용이 불안정한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효성 있는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점
  ·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

(4) 교육 관련

□ 사회이동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제도 교육이 사회적 성취와 계층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
  · Blau와 Duncan의 지위획득모형(status attainment model)은 교육과 사회이동의 상관관계를 규명해낸 대표적 연구[68]

- 중산층 대책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68) Blau, P.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감세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시민들의 사회이동성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등 주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69]
-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도 실업급여나 공공근로 시간을 축소하고 구직자의 개인역량 강화에 주력[70]

- 정부도 최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구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천명[71]
- 구직자 교육훈련비 지원을 늘리고 민간 직업교육기관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계좌제를 확대한다는 방침

취업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 지원 대상 훈련은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에 한하며 1인당 훈련비용의 80%,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로 결제가 가능
- 2008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취업 전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

□ 그러나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보다 중장기적인 계층 이동·유지를 위한 대학 진학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

- 이는 근로자의 취득 학력 간 임금격차가 큰 학벌 위주의 사회적 풍토에 기인
  -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가 1997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72]

- 특히 대졸 근로자 중에서도 출신 대학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회적 통념이 고착

69) 교육재정을 포함한 주정부 지원 예산은 상원에서 390억 달러로 삭감되었으나 상하 양원 조정 후 150억 달러를 늘린 540억 달러 규모로 증액 합의

70) 영국은 고든 브라운 총리 취임 이후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유년기, 취학기, 취업기, 성인기의 4단계로 구분된 라이프 사이클별 교육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며, 독일은 2005년 이후 양질의 일자리 취득을 위한 직업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실업자 대상 공공근로를 주당 30시간으로 제한

71) 기획재정부 (2010. 1. 21.).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72) 1980년에는 대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고졸 근로자 평균 임금의 240%에 달했으나 이후 격차가 감소하기 시작해 1997년 146%로 최저치를 기록. 이후 격차가 재확대되어 2008년 기준 156% 수준을 유지

· 수능성적 기준 1~5위인 대학 졸업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6~10위 대학 졸업자보다 평균 31%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73]

-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사교육비를 지출
· 2008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9,000억 원으로 1인당 월평균 약 23만 3,000원을 지출
· 서울 강남구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69만 4,00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74]

□ 교육에 대한 지나친 투자가 중산층 삶의 질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

- 중산층은 가계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계층
· 한 일간지의 사회계층 조사에서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가장 큰 부담'이라 답한 비율은 핵심 중산층이 56%, 상류층 45.4%, 한계중산층 37.1% 그리고 빈곤층이 11.8%[75]

- 지나친 사교육비는 중산층의 지출 여력을 축소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

-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라 2세의 교육기회와 사회진출이 보장된다는 통념이 확대되면서 '계층 세습'이라는 논쟁이 확산

3. 향후 정책방향

□ 기존의 성장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계도 존재

- 위기 시 혹은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실업자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락하거나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성장 친화적 정책은 중산층 형성의 필요조건

73) 장수명 (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한국교육』, 33(2), 75-107.
74) 2007년 강남구 사회통계조사
75) EAI & 중앙일보 (2009). "2009 국민 계층의식 조사."

- 하지만 단지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중산층 확충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
  -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세계적인 가치사슬에서 한국기업의 위상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

□ 근로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생산성과 무관한 구조적 근로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

- 근로소득은 중산층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한국 노동시장 내에 일류 대학 출신 여부 등 생산성과 무관한 구조적 근로소득의 격차가 존재

□ 이전소득의 비중 확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

- 한국은 시장소득에 따른 중산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공적 소득이전의 역할은 작아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의 비중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낮은 편

- 공적 소득이전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분야가 자녀 양육비 지원, 출산수당 등 가족수당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신중히 검토

□ 중산층의 처분가능소득 중 삶의 질과 무관한 주거 및 교육 비용의 과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 한국의 중산층과 하위층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거 및 교육 비용의 지출이 큼

- 이 부문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과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부록>

(1) 중산층 특성 이산종속변수 모형 추정

□ 이산종속변수 모형(Probit 모형)을 설정하고 KLIPS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산층을 다른 계층과 구분하는 요인을 탐색

- 종속변수로는 중산층에 1, 하위계층에 0을 할당하는 더미 변수(ML_1, ML_2)와 상위계층에 1, 중산층에 0을 할당하는 더미 변수(HM_1, HM_2)를 설정
  · 각각 중산층이 하위계층으로 하락하지 않는 요인과 중산층이 상위계층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요인을 모색

종속변수 분포 (2007년)

(단위: 가구)

구분	ML_1 (중산층: 50~150%)	ML_2 (중산층: 75~125%)	구분	HM_1 (중산층: 50~150%)	HM_2 (중산층: 75~125%)
중산층	2,300 (62.35%)	1,232 (38.15%)	상위계층	1,570 (40.57%)	2,060 (62.58%)
하위계층	1,389 (37.65%)	1,967 (61.49%)	중산층	2,300 (59.43%)	1,232 (37.42%)

- 독립변수는 가구 특성, 가구주의 인적자본, 고용여건, 근로소득, 근로소득 외 소득 유무 더미, 부채 관련 변수, 부동산 관련 변수, 근로소득을 선정
  · 근로소득이 계층 간 소득 격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포함한 분석과 이를 제외한 분석을 병행
  · 근로소득의 로그값에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추정치와 그 외의 요인을 반영한 잔차를 함께 분석
  · 산업별 근로소득 격차를 고려해서 산업별 더미 변수를 분석에 포함

독립변수 목록 (2007년)

구분	변수
가구 특성	가구원 수, 수도권 거주 더미, 취학연령 자녀 수, 복지수급자 더미
인적자본(가구주)	기혼자 더미, 대졸자 더미, 여성 더미, 연령, 연령 제곱
고용조건	고용 더미, 고용연수, 임시직 더미, 일용직 더미, 자영자 더미
근로소득	가구주의 근로소득 로그값 추정치, 추정 잔차
여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소유 더미
부채	부채총액, 월 부채 비용
부동산(소유)	자가 소유 더미, 아파트 소유 더미, 평수 ,주택가치, 자가 외 부동산 소유 더미
부동산(임대)	월세, 임대보증금
조정변수	산업 더미

주: 1) 근로소득과 여타소득 관련 변수는 1년 전 값을 사용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변수와의 중복을 회피
2) 부채총액, 주택가치,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 단위, 부채비용은 만 원 단위, 근로소득은 월평균 소득으로 자영업 소득과 임금 근로자 임금을 포괄하며 만 원 단위
3) 주택 평수는 단독주택은 연건평, 여타주택은 전체 평수를 의미
4) 복지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의미

□ 근로소득을 취득하기 용이한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로소득이 높을 경우 하위계층보다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

- 근로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가구주가 남성-장년층-대졸-기혼자이면서 장기 근속자이고 상용직인 가구가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높음
  - 가구원이 많을수록 중산층일 확률이 높으나, 취학연령 자녀 수가 많을수록 중산층일 확률이 낮아 양육비 부담이 계층 간 격차를 가져옴을 시사
  - 인적자본의 효과를 제외하면 자영자는 상용직보다 하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8.4% 높은 것으로 판명

- 근로소득 추정치가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24.4~41.0% 증가하나 고용 더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음
  - 단순한 고용 여부보다는 근로소득 수준이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시사
  - 인적자본과 제도 요인을 제외한 근로소득 격차를 반영하는 근로소득 추정치 잔차도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23.8% 증가

-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을 취득한 가구는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높으나 부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는 중산층일 확률이 14.5~15.8%, 기타소득이 있는 가구는 12.3~13.6% 높음
  - 중산층 소득 중 금융소득의 비중은 1.1%로 하위계층의 1.9%보다 낮으나 금융소득 수준이 높아 중산층과 하위계층 소득 격차의 0.8%는 금융소득에서 발생
  - 부채 규모 및 이자 지불 부담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이는 부채 규모가 금융시장 접근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높은 임대보증금을 지불한 가구가 중산층일 확률이 높음
  - 부동산 관련 변수 중 자가 소유 더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어 주택 소유 여부보다는 거주 주택의 종류와 크기가 중요한 변수로 판명
  - 임대보증금은 임대 기간 이후에 회수받는 자금이므로 부담보다는 자금 동원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 가능

중산층과 하위계층 결정 이산종속변수 모형 한계효과 추정 결과
(종속변수 = ML_2)[76]

(괄호 안은 P 값)

구분	변수	dP/dX		
가구 특성	가구원 수	0.099*** (0.000)	0.104*** (0.000)	0.108*** (0.000)
	복지수급 더미	-0.243** (0.029)	-0.135 (0.292)	-0.067 (0.612)
	수도권 더미	-0.026 (0.398)	-0.040 (0.228)	-0.041 (0.239)
	취학연령 자녀 수	-0.062*** (0.010)	-0.063** (0.014)	-0.069*** (0.010)
인적자본	여성 가구주 더미	-0.103* (0033)	-0.018 (0.751)	0.053 (0.377)
	연령	0.023** (0.017)	0.003 (0.840)	0.006 (0.633)
	연령제곱	-0.0003*** (0.001)	-0.0001 (0.497)	-0.0001 (0.467)
	대졸자 더미	0.123*** (0.001)	0.092* (0.037)	0.113** (0.014)
	기혼자 더미	0.090* (0.044)	0.018 (0.722)	0.031 (0.544)

76) 종속변수를 ML_1으로 놓고 한 분석도 결과가 유사

고용조건	고용 더미	-0.436 (0.054)	-0.409 (0.077)	-0.402 (0.113)
	근속연수	0.005*** (0.003)	0.000 (0.889)	-0.001 (0.610)
	임시직 더미	-0.148*** (0.009)	-0.098 (0.147)	-0.082 (0.239)
	일용직 더미	-0.136*** (0.010)	-0.084 (0.170)	-0.045 (0.481)
	자영자 더미	-0.084** (0.030)	-0.081 (0.053)	-0.053 (0.227)
근로소득	**근로소득 추정치_1**	**-**	**0.244*** **(0.003)**	**0.410*** **(0.000)**
	근로소득 추정치 잔차_1	**-**	**-**	**0.238*** **(0.000)**
여타소득	금융소득 유무_1	0.158** (0.017)	0.145* (0.036)	0.159** (0.027)
	부동산소득 유무_1	0.014 (0.845)	0.075 (0.349)	0.127 (0.134)
	사회보험소득 유무_1	0.090 (0.078)	0.089 (0.101)	0.103 (0.074)
	이전소득 유무_1	-0.059 (0.054)	-0.047 (0.150)	-0.035 (0.301)
	기타소득 유무_1	0.136*** (0.002)	0.130 (0.007)	0.123** (0.014)
부채	부채총액	-0.003 (0.183)	-0.003 (0.193)	-0.003 (0.247)
	월부채비용	0.000 (0.405)	0.000 (0.351)	-0.001 (0071)
부동산 (소유)	자가 소유 더미	0.030 (0.635)	0.008 (0.905)	-0.014 (0.843)
	아파트 거주 더미	0.088*** (0.005)	0.097*** (0.003)	0.080** (0.019)
	평수	0.004* (0.033)	0.006*** (0.004)	0.007*** (0.002)
	주택가치(시가)	0.001 (0.686)	0.000 (0.913)	-0.001 (0.826)
	자가 외 부동산 소유 더미	0.007 (0.868)	0.025 (0.585)	0.020 (0.686)
부동산 (임대)	임대보증금	0.026*** (0.003)	0.030*** (0.001)	0.034*** (0.001)
	월세	0.003 (0.115)	0.003 (0.093)	0.003 (0.130)
	log likelihood	-890.852	-789.371	-738.305
	의사 R^2	0.206	0.230	0.381
	추정확률 평균	0.539	0.562	0.565
	표본 확률	0.537	0.561	0.564
	표본 수	1,627	1,496	1,472

주: 1) 추정확률 평균은 추정된 중산층에 속할 확률의 표본 내 평균값, 표본 확률은 중산층에 속할 확률이 추정 된 표본 내에서 중산층의 비중
2) 저소득층은 미응답이 많아서 추정에 포함된 표본에서는 중산층의 비중이 모집단보다 높음
3)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3%,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4) _1은 1년 전 값임을 의미

□ 근로 및 금융 소득이 높고, 고가주택을 보유 혹은 임대하였으며, 자가 외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는 중산층보다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음

- 장년층 대졸 기혼자이면서 근속연수가 길고 일용직이 아닌 가구주가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 가구주가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도 높음
  - 상위계층 여성 가구주 가구는 맞벌이 비중이 18.18%로 중산층의 4.55%, 하위계층의 0.34%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성 가구주가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근로소득 추정치가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상류층에 속할 확률이 28.6~43.5% 증가하며 여성 가구주와 기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음
  - 역시 고용 더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으며, 이는 고용보다는 근로소득 수준이 상위계층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시사
  - 근로소득 추정치 잔차도 1로그 포인트 증가하면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29.4% 증가

- 금융소득이 있고, 이자 지불 비용이 높은 가구는 중산층보다는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아 금융시장 접근성이 상위계층의 특징임을 시사
  -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가 상위계층일 확률이 12.3~15.3% 높으며, 월 부채비용이 1만 원 높으면 상위계층일 확률이 0.1% 높음
  - 이는 중산층 이상에서는 부채비용이 금융시장 접근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해석

- 고가주택을 보유·임대하거나 자가 외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가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아 부동산이 상위계층 귀속의 중요 요소임을 시사
  - 소유 주택의 시가가 1,000만 원 높은 가구는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0.5%,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 높은 가구는 1.6~2.1%
  - 자가 외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가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은 6.9~7.9% 높음

중산층과 상위계층 결정 이산종속변수 모형 한계효과 추정 결과 (종속변수 = HM_2)[77]

(괄호 안은 P 값)

구분	변수	dP/dX		
가구 특성	가구원 수	0.072*** (0.000)	0.078*** (0.000)	0.083*** (0.000)
	복지수급 더미	-0.261 (0.198)	-0.140 (0.476)	-0.166 (0.455)
	수도권 더미	-0.003 (0.899)	-0.031 (0.184)	-0.029 (0.220)
	취학연령 자녀 수	-0.040*** (0.010)	-0.044** (0.005)	-0.057*** (0.000)
인적자본	여성 가구주 더미	0.103** (0.015)	0.171*** (0.000)	0.212*** (0.000)
	연령	0.019** (0.022)	-0.006 (0.546)	-0.011 (0.308)
	연령제곱	-0.0002** (0.029)	0.0001 (0.316)	0.0002 (0.106)
	대졸자 더미	0.094*** (0.000)	0.026 (0.355)	0.037 (0.208)
	기혼자 더미	0.171*** (0.000)	0.110** (0.013)	0.158*** (0.001)
고용조건	고용 더미	0.317 (0.095)	0.356 (0.055)	0.329 (0.080)
	근속연수	0.004*** (0.001)	0.000 (0.878)	-0.002 (0.177)
	임시직 더미	-0.097 (0.079)	0.023 (0.696)	0.028 (0.626)
	일용직 더미	-0.135*** (0.005)	-0.046 (0.369)	-0.004 (0.929)
	자영자 더미	0.041 (0.105)	0.019 (0.461)	0.018 (0.490)
근로소득	**근로소득 추정치_1**	**-**	**0.286*** (0.000)**	**0.453*** (0.000)**
	근로소득 추정치 잔차_1	**-**	**-**	**0.294*** (0.000)**
여타소득	금융소득 유무_1	0.153*** (0.000)	0.146*** (0.000)	0.123*** (0.000)
	부동산소득 유무_1	0.019 (0.663)	0.025 (0.578)	0.039 (0.393)
	사회보험소득 유무_1	-0.079 (0.060)	-0.042 (0.329)	0.019 (0.661)
	이전소득 유무_1	-0.009 (0.672)	-0.008 (0.714)	-0.001 (0.950)
	기타소득 유무_1	0.019 (0.504)	0.036 (0.229)	0.037** (0.214)
부채	부채총액	0.002 (0.456)	0.002 (0.417)	0.000 (0.845)
	월부채비용	0.001*** (0.000)	0.001*** (0.001)***	0.001** (0.013)

77) 종속변수를 HM_1로 놓고 한 분석도 결과가 유사

부동산 (소유)	자가 소유 더미	0.005 (0.901)	0.001 (0.990)	0.004 (0.933)
	아파트 거주 더미	0.024 (0.293)	0.0197 (0.406)	-0.001** (0.948)
	평수	0.002 (0.068)	0.002 (0.105)	0.001 (0.498)
	주택가치(시가)	0.005*** (0.000)	0.005*** (0.000)	0.005*** (0.000)
	자가 외 부동산 소유 더미	0.078*** (0.003)	0.079*** (0.003)	0.069*** (0.012)
부동산 (임대)	임대보증금	0.021*** (0.000)	0.019*** (0.000)	0.016*** (0.001)
	월세	0.000 (0.900)	0.000 (0.850)	0.000 (0.783)
	log likelihood	-1332.847	-1271.511	-1165.382
	의사 R^2	0.179	0.189	0.246
	추정확률 평균	0.651	0.654	0.654
	표본 확률	0.653	0.656	0.653
	표본 수	2,510	2,430	2,394

주: 1) 추정확률 평균은 추정된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의 표본 내 평균값이고, 표본 확률은 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추정 된 표본 내에서 상위계층의 비중
2)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3%,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근로소득 추정

□ 근로소득 추정에는 인적자본 변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더미, 산업 더미, 직종더미, 종사상 지위 더미, 지역 더미를 포함

- 독립변수로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액과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사용

- 인적자본 변수는 여성 더미, 연령, 연령 제곱, 경력자 더미, 기혼자 더미를 포괄하여 성별 임금 격차와 생산성에 따른 임금 격차를 반영

-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지역 더미 변수는 각 노동 시장 간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를 반영
  - 산업 더미와 직종 더미는 노동패널의 산업 및 직종 대분류를, 지역 더미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며 제조업 및 사무직 근로자 더미를 제외
  - 종사상 지위 더미는 일용직, 임시직, 자영자/고용주 더미를 포함하고 상용직 더미를 제외

□ 노조 조직, 전일제 여부, 기업체 규모 변수는 응답표본이 너무 적어서 제외하였으며, 이들의 영향은 잔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전일제 여부의 경우 종사상 지위와 정보가 중복되는 경향도 존재

- 노조 유무와 기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생산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제도적 조건에 의한 지대 분할의 성격이 존재

근로소득 추정 결과 (2006년)

변수	계수	t 값	p 값
여성 가구주 더미	-0.345***	-8.31	0.000
연령	0.097***	11.9	0.000
연령제곱	-0.001***	-13.38	0.000
대졸자 더미	0.219***	7.98	0.000
기혼자 더미	0.216***	6.97	0.000
근속연수	0.097***	8.76	0.000
복지 수급자 더미	-0.629***	-5.04	0.000
임시직 더미	-0.243***	-5.00	0.000
일용직 더미	-0.271***	-6.89	0.000
자영자 더미	0.080***	2.56	0.010
R^2	0.500	-	-
표본 수	3,499	-	-

주: 1) 산업, 직종, 지역 더미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생략
2)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3%, *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참고문헌

금재호 외(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Ⅰ).”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재정부 (2010. 1. 21.).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마상열 (2007). “일본의 재도전 종합 지원계획”(해외정책동향 2007-1). 경남발전연구원.

박재룡 외 (2009). “경기부양에 기여하는 주택정책의 추진방안”(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성명재 (2009). “소득분배 동향 고찰.” 『재정포럼』, 160, 27-50.

양준호 (2007). “그 많던 일본의 중산층은 어디로 갔나-격차사회,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월간말』, 255, 168-173.

이동원 외 (2009).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철희 (2006). “1996~2000년 가구소득불평등 확대요인 분해: 임금, 고용, 근로시간, 가구구조 변화의 효과.” 신인석·한진희 (편),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분석과 정책방향』(pp. 345-388). 서울: KDI.

유경준, 최바울 (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1).

장수명 (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한국교육』, 33(2), 75-107.

전경련 (2009).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정이환 (2007).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 분석”. 『경제와 사회』, 73, 332-355.

중앙일보 & EAI (2009). “2009 국민 계층의식 조사.”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하세정 (2009). “영국 뉴딜정책 시행 10년: 평가와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68-73.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2009).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09). “근로소득 불평등도의 국제비교”. 『노동리뷰』, 57호, 69-7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자료.

経濟財政諮問會議 (2007). "経濟財政改革の基本方針 2007".

Acemoglu, D. & Zilibotti, F. (1997). Was Prometheus Unbound by Chance? Risk, Diversification, and Growth.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4), 709-751.

Alesina, A. & Rodrik, D. (1994).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109(2), 465-490.

Blau, P.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Banerjee, A. V. & Duflo, E. (2008). What is Middle Class about the Middle Classe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3-28.

Bourguignon, F. & Verdier, T. (2000). Oligarchy, Democracy, Inequalit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2(2), 285-313.

Devroye, D. & Freeman, R. (2001). Does Inequality in Skills Explain Inequality of Earnings across Advanced Countries? (Working Paper 8140). NBER.

Doepke, M. & Zilibotti, F. (2005). Social Clas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2-3), 516-524.

Easterly, W. (2001).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6(4), 317-335.

Easterly, W. (2002). What did Structural Adjustment Adjust? The Association of Policies and Growth with Repeated IMF and World Bank Adjustment Loans(Working Papers 11).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Easterly, W., Ritzen, J. & Woolcock, M. (2006).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Economics & Politics,* 18(2), 103-120.

Fernandez, R., Guner, N. & Knowles, J. (2005). Love and Mone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Household Sorting and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 273-344.

Galor, O. & Zeira, J. (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1), 35-52.

Landes, D. (1998).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Lipset, M. S.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69-105.

McCarty, N., Poole, K. & Rosenthal, H. (2006). *Polarized America*. Cambridge: MIT Press.

Middle Class Task Force (2009).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Helping Middle-Class Families(MCTF Staff Report).

Moore, Jr., B.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MA: Beacon Press.

Murphy, K. M., Schleifer, A. & Vishny, R. W. (1989). Industrialization and the Big Pu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5), 1003-1026.

Perotti, R. (1996).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cy: What the Data Say.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149-188.

Persson, T. & Tabellini, G. (1994). Is Inequality Harmful for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4(3), 600-621.

Rajan, R. & Zingales, L. (2003). *Saving Capitalism form the Capitalists*. New York: Crown Business.

Rodrik, D. (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4(4), 385-412.

Schlesinger, R. (2009. 11. 25.). The Staggering Rise of the Filibuster. *U.S. News & World Report*.

The Other Moore's Law. (2009. 2. 12). The Economist.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0). Middle Class in America.

통계청, KOSIS.

Luxembourg Income Study, Inequality & Poverty Key Figures.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B.

OECD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STAN DB

SourceOECD, Statistics.

U.S. Census Bureau, CPS 추계.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U.S. Census Bureau, Income Statistics.
World Bank, WDI.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